

碩士學位 請求論文

金日成 死後 北韓體制的
變化展望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李 鍾受

이 論文을 行政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1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一般行政 專攻

尹 錫 香

論文認准書

尹錫香의 行政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1991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鄭成澤 

審査委員 黃振洙 

審査委員 李鍾受 

目 次

第1章 序 論	5
第1節 研究의 目的	5
第2節 研究範圍 및 方法	8
第2章 金日成體制의 構築過程과 그 特性	10
第1節 金日成體制의 構築過程	10
1. 戰後 處理過程과 國土分斷	10
2. 左·右 對立과 政府分斷	12
3. 6.25戰爭과 金日成 獨裁基盤의 構築	13
第2節 主體思想과 權力基盤의 確立	19
1. 主體思想의 形成背景	19
2. 主體思想의 內容과 體系	21
3. 主體思想을 통한 權力基盤의 維持 및 強化	24
第3節 金日成體制의 特性	28
1. 로동당 1黨의 支配體制	28
2. 金日成 父子世襲體制	35
3. 主體思想에 의한 統治體制	41

第3章 北韓體制變化에 대한 壓力要因	45
第1節 內部的 壓力要因	45
1. 金日成體制的 問題點	45
2. 金正日 後繼體制的 問題點	49
第2節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른 外部的 壓力要因	51
1. 美·蘇 兩極體制的 崩壞	51
2. 蘇聯共產黨의 沒落과 社會主義國家의 改革	54
3. 東·西獨의 統一	60
第3節 南北韓關係變化에 따른 壓力要因	63
1. 韓國의 北方政策 推進	63
2. 北韓의 對外政策 基調의 變化	66
3. 南北韓 유엔加入과 새로운 南北關係의 定立	70
第4章 金日成 死後의 北韓體制 變化展望	74
第1節 體制變化 動因과 改革類型	74
1. 體制變化의 動因	74
2. 社會主義國家의 改革類型	77
第2節 統治構造와 政治理念의 變化展望	82
1. 統治構造의 變化	82
2. 政治理念의 變化	84

第3節 經濟·外交·統一政策의 變化展望	85
1. 經濟政策의 變化	85
2. 外交政策의 變化	87
3. 統一政策의 變化	91
第5章 結 論	93
參考文獻	97
ABSTRACT	103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분단이후 南北韓은 체제와 이념의 相異로 인한 첨예한 갈등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이질적인 社會體制와 적대적인 政治體制의 고착화를 심화시켜 왔다. 그 결과 민족적 동질성이 퇴색되고 쌍방에 대한 반목이 조장되어 남북한은 별다른 관계의 진전없이 상호 불신만을 증폭시켜 왔다.

반면 1978년 등소평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정치의 脫冷戰 현상은 1985년 고르바초프의 출현을 계기로 구체화되면서 國際政治에서는 이데올로기와 군사력의 논리를 초극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즉 과거에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국제관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의 軍事力支配 論理가 퇴조하고 실리위주의 經濟的 論理가 국제관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¹⁾

이러한 국제적 역학관계의 매우 큰 변화는 유럽과는 달리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만은 아직까지도 세계 열강들의 각축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매우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반도는 베트남과 독일이 통일을 이룬 현시점에서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이념적·정치적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아직도 다른 社會主義國家들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體制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조적 공산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 金成允, 「新데탕트氣流下의 韓半島」(서울: 半島出版社, 1991), pp. 18~20.

즉 북한은 표면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주체사상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원칙마저도 팽개치고 김일성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병영체제로 화하였고 나아가서는 부자세습의 봉건왕조체제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부자를 절대신으로 모시기 위하여 내부사회를 밀폐시킨 상황에서 유일하게 개혁과 개방과 같은 세계사적 변화의 조류를 거역하기 때문인 것이다.

북한이 이렇듯 世界的 潮流를 거역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택해 왔던 소련과 동구 등 여러 나라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와 協同 所有를 確立하는 가운데서도 개인적 소유의 폭을 확대시켜 왔고, 改革·開放을 통하여 자유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이러한 세계조류 및 동맹국들의 개혁·개방정책 채택과는 달리 기존의 개인소유 폭을 좁혀왔을 뿐만 아니라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방침까지도 제시하면서 시장기능을 완전히 억제시켜왔다.²⁾

따라서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동구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으며, 제3차 7개년계획의 추진이래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국내적으로 매우 큰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침체 현상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이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 및 소련 공산당의 몰락·연방체제의 해체 등으로 인해 북한은 중요한 후원자를 잃게 되었다.³⁾

2) 國土統一院, 「통일문답」(서울: 국토통일원, 1991), p.232.

3) 북한은 최근 소련으로부터의 원유공급중단으로 최대의 정유소가 가동을 중단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한국일보」, 1991. 10. 19.

특히 소련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經濟·技術·軍事援助가 끊긴 현재에 있어서 중국으로서는 그 공백을 메울만한 능력이 없다. 중국과 북한은 과거로부터 다같이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최빈국에 속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역량으로는 북한을 도울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政治的·經濟的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스스로 빠져든 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세계사적 변화의 조류를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국제고아로 남아있을 수만은 없다. 그들은 짐승하는 父子世襲體制의 모순과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중·소 등 후진국가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특히 소련에서의 공산당 몰락과 같은 큰 변화로부터 오는 충격, 동구의 변혁으로부터 오는 영향으로 체제의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현 북한체제의 실정으로 볼 때 가장 결정적인 변화요인이 될 수 있는 변수는 바로 김일성의 老齡化에 따른 권력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金日成은 1912년 4월 15일생으로서 내년이면 80세의 나이로 접어들게 되며, 이는 보통 인간의 수명을 감안해 볼 때 김일성에 의한 통치는 그 기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는 專門家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 變化의 제1의 요인으로 김일성의 사망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시점을 북한 변화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⁴⁾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앞으로 10년을 넘기지 못할 김일성의 죽음과 함께 국내외적인 압력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방향은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가?

4) 서울신문, “일본 전문가가 진단한 평양의 앞날”, 1990. 6. 14.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統治構造라든가 政治理念 그리고 經濟, 外交 및 統一政策 등 對內外政策의 全分野에 있어서의 변화상태는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어 갈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변화양상을 전망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第2節 研究範圍 및 方法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김일성 死後 北韓體制의 變化를 예측하고 전망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많은 문헌적 자료와 관계전문가의 견해를 원용하여 가설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김일성은 자신의 카리스마와 주체사상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북한사회에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김정일의 경우 金日成 死後에 김일성과 같은 수준의 이상화와 신격화를 이루어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경제면에서의 실패를 과거의 항일투쟁경력과 40여년간 쌓아올린 절대적인 리더쉽과 권위 등으로 상쇄시켜 온 김일성에 비하면 항일투쟁경력도 카리스마도 없는 김정일은 새로운 세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經濟的 改革이 不可避할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최근 소련공산당의 몰락과 동구의 변혁에 따른 신국제질서의 구축이 북한에 대한 커다란 개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하에서 본 論文은 2장에서 현 북한체제의 구축과정을 정권 수립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고찰해 보고, 이와 아울러 북한의 최

고통치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는 主體思想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으며, 그리고 현북한체제의 특성을 로동당 1당 지배체제, 부자세습체제, 주체사상에 의한 통치체제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어 3장에서는 미·소의 양극체제 붕괴와 동·서 협력체제의 등장이라는 거대한 물결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이해관련국들이 어떠한 정책변화를 보여왔고, 또 어떻게 그들의 대외정책기조를 변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북한체제변화의 내부적·외부적 압력요인과 남북한관계변화에 따른 압력요인을 살펴보겠다. 특히 김일성·김정일 체제로 이원화하여 북한내부체제의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한반도 주변의 이해관련국들의 다자적·쌍무적 관계의 변화추이에 따른 대북한정책변화가 체제변화에 어떻게 외부적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점을 추론해 보겠다. 또한 같은 민족이면서도 40여년간의 분단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유엔동시가입”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하는 점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어 4장에서는 북한체제의 변화전망을 여러 자료를 통해 分析·推論해 봄으로써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가 어떻게 變化해 갈 것인가를 고찰해 보겠다. 특히 북한체제의 변화를 통치구조와 정치이념, 그리고 경제·외교·통일정책부문으로 분류하여 이것이 중국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및 남북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추론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써 논문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각종의 研究報告書와 논문, 기타 각종 정기·비정기 간행물을 전반적으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는 文獻的 學術調查方法을 사용하고, 이러한 文獻資料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및 월남 북한인들을 포함한 관계인사들과의 인터뷰資料를 제2차 자료로 원용하겠다.

第2章 金日成 體制的 構築過程과 그 特性

第1節 金日成 體制的 構築過程

1. 戰後 處理過程과 國土分斷

1943년 6월의 이탈리아의 항복은 第2次世界大戰의 종말의 계기가 되었고 그해 12월에 카이로(Cairo)에서 美·英·中 3國의 수뇌들은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에서 “韓國인민들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韓國을 자유·독립하게 할 것임을 결정한다.”라고 함으로써 韓國의 獨立이 최초로 약속되었다. 이후 아시아에서의 對日戰에 대한 蘇聯軍의 참전이 결정된 얄타회담을 거쳐 1945년 5월의 獨逸의 항복, 같은 해 7월의 포츠담 선언에서는 美·英·中외에 蘇聯도 참여하여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카이로 선언으로부터 포츠담 선언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회담을 거치는 동안 美國의 일관된 태도는 2次大戰 이후 韓半島에 대한 지배권을 특정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信託統治案을 관철시키려는 데 있었다.⁵⁾

이후 日本의 항복에 따라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해 美·蘇 兩國은 편의대로 38선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1945년 8월 13일에 蘇聯이 北韓지역에 들어오고 8월 26일에는 北韓의 統治權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에 반해 美國은 한달여 뒤인 1945년 9월 9일에 이르러서야 南韓에 진주하여 10월 말경에 남한의 통

5) 얄타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Roosevelt)는 한반도에서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는데, 이때 루즈벨트와 스탈린(Stalin)사이의 견해의 차이는 신탁통치에 관한 기간의 길고 짧음에 불과하였다.(*Foreign Relations,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1945*(Washington ; USGPO, 1955), p.770) 이때 루즈벨트는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기간을 20~30년 정도로 잡았고, 스탈린은 가능한 짧을수록 좋다는 견해를 보였다.

치권을 접수하게 되는데, 당시 북한의 경우 蘇聯軍에 의해 내세워진 김일성을 지도자로 하여 북한지역의 共產化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었다.

이와 같이 美·蘇의 편의에 의해 확정되어진 38선은 이후 우리 민족의 분열과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⁶⁾ 그런데 蘇聯이 북한의 지도자로 김일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점에 대하여 서대숙 교수는 蘇聯이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별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⁷⁾ 즉 그 당시의 소련은 北韓보다는 동유럽쪽에 더 큰 관심이 있었고 蘇聯은 韓國의 인물들에 대한 사전정보도 거의 없는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명목상의 지도자를 한사람만 내세우면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韓國의 土着 共產勢力들은 蘇聯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으므로 蘇聯으로서는 자신들의 제복을 입고 자신들의 훈련을 받은 조선인으로서는 김일성밖에 별다른 인물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蘇聯은 일단 김일성을 지도자로 결정하자 그를 부각시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노력하였고, 南北韓을 분할점령한 美國과 蘇聯은 각각 점령지역에서 軍政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北韓地域에 진주한 소련은 처음에는 김일성이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 진영을 포함한 獨立運動家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5도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軍정하에서의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련군정은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1948년 10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6) 38도선이 확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C. Leonard Hoag,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War Policy and the First Year of Occupation 1941~1946*(Washington : OCMH, 1970), pp. 66~68.

7) 서대숙(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 청계연구소, 1989), pp. 56~57.

이북5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북한만의 정치적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미군정당국은 소련에 의한 한반도 지배를 막고 남한내에서의 공산세력의 부식을 저지하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결국 분단이후 美·蘇양국의 군정정책은 상호 세력확대를 저지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처음부터 철저히 분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루어갔던 것이다.⁸⁾

2. 左·右 對立과 政府分斷

1945년 10월 24일 서울시내의 일간신문에는 그 당시의 美國務省 극동국장 이었던 브인센트가 10월 20일에 美國외교정책협의회 석상에서 행한 “조선에서는 우선 信託統治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다. 물론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3相회의에서 韓半島에 대한 信託統治를 5년이내로 실시할 것이 결정되었다.⁹⁾

이같은 신탁통치 결정에 관한 반응은 처음에는 좌·우가 모두 反託의 입장이었다. 먼저 그 당시 국민당중앙위원이었던 안재홍씨는 “뉴욕발 외신이 허위보도를 할리는 없겠지만 이런 매일수룩 온 국민이 함심해서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외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아무리 해방의 은인이라 하더라도 비우호적인 조치나 정치적 과오를 저질렀을 때에는 우리는 용감히 그것을 시정하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조선공산당도 김삼

8)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 135~137.

9) 모스크바 3상회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U.S. Department of State, *Moscow Meeting of Foreign Minister : December 16~26, 1945* (USGPO, 1955), pp. 14~16.

통 명의로 “신탁통치의 규정여하를 막론하고 조선의 현실을 무시한 조처이다…(중략)…신탁통치 운운하는 것은 일부 친일파 반동세력의 책동이다.”라고까지 함으로써 신탁통치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¹⁰⁾

그러나 이후 蘇聯의 사주를 받은 북측의 공산세력이 돌연 찬탁으로 돌아섬으로써 한국의 정치세력은 찬탁·반탁으로 분리되어 左右對立이 격화되어 갔다. 더욱이 소련측은 새로이 세워질 임시정부에 반탁인사들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반탁우익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 기반을 상실한 미국은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유엔소총회에서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결의함으로써, 1948년에는 서울과 평양에 이념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두개의 정부가 들어서서 1945년의 국토분단에 이은 제2차분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6.25戰爭과 獨裁基盤의 構築

1) 6.25戰爭의 原因과 結果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구구하다. 물론 북한은 6.25전쟁을 미국과 남한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련이 북한의 김일성으로 하여금 민족해방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¹¹⁾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6.25전쟁은 소련의 사주나 종용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북한의 주도과 선제공격에 의해 개시된 전쟁이라는 견해가 강력히 제시되고

10) 세문사편, 「해방 20년(기록편)」(서울:세문사, 1965), p.278.

11) 서대숙, 前揭書, p. 97.

있다.¹²⁾ 물론 그 당시에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전쟁의 주도권은 북한정권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6.25전쟁의 제안자는 스탈린도 모택동도 아닌 김일성이었다는 점을 흐루시초프의 미공개된 회고록에서도 지적되고 있다.¹³⁾

어쨌든 남북한간에 사상자 및 실종자 300만명, 피난민 370여만명, 그리고 10여만명의 전쟁고아를 양산해 낸¹⁴⁾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의 원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¹⁵⁾

i) 남한주둔 미군의 철수, ii) 미국의 태평양 방위권내에서 남한이 제외된 것(이른바 에치슨 선언), iii) 5.30선거의 성공과 함께 남한의 기반이 대내외적으로 굳어져 가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이같은 일반론에 대해 서대숙 교수는 국제적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¹⁶⁾

i)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재통일하려는 김일성의 개인적인 결심
ii) 1949~50년 사이에 2개년계획이 차질을 빚음으로써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
iii) 김일성과 남한에서 월북한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불편한 관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남침야욕을 고무시킨 주요한 계기는 미국정부의 외교정책적 판단과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1949년 6월부터 1950년 6월의 1년 동안에 미국동사령관이 북한의 남침이 임박했음을 미국정부에

12) Robert R. Simmons와 Bruce Cummings 등의 견해가 그것이다. Bruce Cummings, op. cit.

13) 공보처, 「흐루시초프 미공개 회고록」(서울: 공보처, 1991), pp. 6~8.

14) 김양명, 「한국전쟁사」(서울: 일신사, 1981), pp. 483~492.

15) 세문사편, 前揭書, p. 352.

16) 서대숙, 前揭書, p. 98.

경고한 횡수가 1200번이나 되었다는 점과¹⁷⁾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이에 대한 적절한 억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과오를 저질렀던 것이다.¹⁸⁾

그러나 개전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자 미국은 큰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한반도에 예상외로 신속한 개입을 결정하였다.¹⁹⁾ 6월 30일에 미지상군의 투입이 결정되자 북한의 김일성은 그 다음날 일반동원령을 발포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김일성은 미국의 전쟁개입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또한 김일성은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즉 국민당에 승리를 거두고 중국을 공산화한 毛澤東은 내전을 통한 승리였으나, 북한은 유엔에 의해 승인된 국가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어쨌든 이와같은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은 南北韓間에 끊임없는 적개심과 상호불신의 원천이 되었고 전쟁의 결과로 빚어진 남북한 사회의 상호 비방과 파행적인 관계는 중국이나 통일이전의 독일 등과 같은 다른 분단국가와는 또다른 한국만이 지닌 특징이며 비극이라고 하겠다.

또한 김일성의 체제구축이라는 측면에서 6.25전쟁은 김일성이 許哥而를 중심으로 한 소련파와 박헌영을 추종하는 이승엽 등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뿌리치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

17) Michael Doyle, "Endemic Surprises : Strategic Surprises in First World-Third World Relations" in Klaus Knorr and Patrick Morgan, *Strategic Military Surprise*(New Brunswick ; Transaction Books, 1983), p. 80.

18) Louis J. Halle,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Security ; A Power for the Nuclear Age*(New York : The University of America, 1984), pp. 54~66 ; Walter H. Judd, "The Mistakes that Led to Korea" in *Reader's Digest*(November 1950), pp. 54~55.

19) U.S., *The Congressional Record*(June 30, 1950), pp. 953~954 ; 「해방 20년」, pp. 353~364.

20) Glen D. Paige, *The Korean Decision*(New York : The Free Press, 1968), pp. 263~264.

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 당시 숙청에 사용된 명목이나 구호는 ‘반혁명’이 1/3, ‘종파분자’가 1/4, ‘보수주의, 출세주의’가 1/6정도였으며,²¹⁾ 이때 김두봉 등의 연안파도 제거되었다. 이로써 김일성은 경쟁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확고부동한 독재체제를 수립하게 되었다.

2) 金日成 獨裁基盤의 構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일성이란 인물은 소련에 의해 급조되어 정권을 인수한 자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김일성은 권력장악 과정에서 수 많은 정적들의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낮은 지명도와 주민의 낮은 지지도를 감안해 볼 때 그로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정권장악의 방법은 폭력과 테러에 의한 숙청 뿐으로서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김일성은 권력장악 과정에서 무자비한 숙청과 테러를 통하여 전체주의적인 일인독재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터커(R.C. Tucker)같은 학자는 이처럼 숙청과 폭력에 의해 구축·유지되는 체제를 가리켜 “단일정당이 지배하는 혁명적 대중운동체제(revolutionary mass movement regime)”라고 부르면서 이 체제는 혁명정당에 의해 체제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고 개인의 퍼스내리티(personality)에 의해 혁명이 인도되고 결국 전체주의적 독재체제화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²²⁾

북한체제의 구축과정은 바로 이같은 반대파에 대한 테러와 숙청으로 점철된

21) 이용필 편저, 「북한정치체제」(서울 : 교육과학사, 1985), p. 338.

22) Robert C. Tucker, *The Soviet Political Mind*(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1971), pp. 8~17.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즉 김일성은 당시 중국 및 소련 그리고 국내에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벌이던 세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統一戰線을 형성하고 있었다.²⁴⁾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련의 지지를 받으면서 組職能力과 戰略·戰術구사에 뛰어난 김일성의 갑산파가 타세력을 압도하고 전면에서 부상하게 되었다.²⁵⁾ 그 당시 소련이 북한지역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민족주의자인 조만식선생이라든가 국내 토착공산세력을 이끌던 박헌영같은 인물을 선택하지 않고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씩 다르지만²⁶⁾ 결과적으로 소련의 의도는 달성되고 있었다.

1948년 9월 북한에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자 소련은 북한정권이 계속해서 소련에 대하여 충성을 유지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를 위해 소련은 소련의 공무원, 소련시민, 소련에 거주했던 북한지도자, 조선노동당과 정부내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한국인 2세로 하여금 북한정

23) 아렌트(Hannah Arendt)도 전체주의 체제의 본질을 테러(terror)에 두고 있다.

Hannah Arendt,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New York : Harcourt Jovanovich, 1951), p. 315.

24) 해방이후부터 1948년 12월 이전까지 북한내의 지배적인 4대 정치세력으로서는 ① 국내공산주의자 집단, ② 중국으로부터 귀환한 연안파, ③ 적군과 함께 입북한 소련파, ④ 민족주의 세력을 들 수 있다.

Chong-sik Lee, "Politics in North Korea : Pre-Korean War Stage", "Robert A. Scalapino(ed.), *North Korea Today*(New York : F. A. Praeger, 1963), p. 5.

25) Robert A. Scalapino &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Vol. 1(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376~380.

26) 소련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선택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서울 : 한울, 1987), pp. 26~29 ; 서대숙,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서울 :禾多, 1985), p. 286 ; 양호민, 「북한의 공산화과정연구」(서울 : 고려대학교 부설 아시아문제연구소, 1973), pp. 2~4.

권이 소련에 추종할 수밖에 없도록 각 기구들을 철저히 장악하였다.²⁷⁾ 그리고 북한의 경제구조를 소련의 필요에 맞도록 재조정함으로써 6.25전쟁을 전후한 1950년대에는 북한의 대외무역의 75% 정도가 소련과 이루어졌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철저한 소련종속하에 놓이게 되었다.²⁸⁾

그러나 6.25전쟁의 막바지에 중공군의 참전은 북한을 소련의 완전지배하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독재체제구축을 위한 반대파에 대한 피의 숙청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9월에 국내 공산주의 세력의 지도자였던 현준혁의 암살로부터 시작된 김일성의 반대파 숙청 작업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이유로 조선민주당 당수였던 조만식선생을 투옥시켰으며, 6.25전쟁 이후부터는 더욱 본격화되었는데 그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적의 제거·숙청 과정에서 김일성은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등을 6.25패전의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통일전선전술을 적절히 활용하였다.²⁹⁾

어쨌든 김일성은 숙청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탁월한 전술과 통치술을 발휘하여 정적제거와 주민통치에 성공하고 항일 투쟁정신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른바 주체사상을 혁명과 전술의 지도원리로 강조함으로써 유일 독재지배체제의 확립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27) 「북한정치론」(서울: 북한연구소, 1984), p. 96.

소련은 북한권력구조내에서 극히 중요한 부서 약 200여개의 요직에 모두 한국계 소련인으로 임명하였다. U. 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Washington D. C.: USGPO, 1961), p. 101.

28) 최창윤, “북한의 대중·소정책”, 고병철외, 「북한외교론」(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7), pp. 53~54.

29) 한용원, 「창군」(서울: 박영사, 1984), p. 181; 임 은, 「북한 김일성 왕조비사」(서울: 한국양서, 1982), pp. 205~225; 이용필, 前揭書, p. 338; 양호민, 前揭書, p. 10.

〈表 1〉 北韓의 主要人物 肅清段階

段 階	肅 清 對 象	重 要 肅 清 人 物	期 間
1	남 로 당	이승화, 이강국, 박헌영 등	1953~1955
2	소 련 파	허가이, 박창옥, 김승화 등	1952~1956
3	연 안 파	무정, 박일우, 최창익, 김두봉 등	1956~1958
4	국 내 파	주영하, 최승희 등	1953~1970
5	빨 치 산 파	박효순, 백금철, 김창봉, 김광협, 허봉학 등	1969~1974

出處：梁好民, 北韓의 共產化過程 研究, 高大 亞細亞研究所, 1973.

第2節 主體思想과 權力基盤의 確立

1. 主體思想의 形成背景

주체사상이란 북한이 처해 있는 환경적 여건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르크스-레닌(Marx-Lenin)주의의 변형된 하나의 형태로 볼 수도 있다.³⁰⁾ 또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나 실용주의처럼 시대와 환경변화에 순응하기 보다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폐쇄화 되는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국가활동과 정책의 기본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30) 마르크스주의는 지금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 외에도 스탈린주의, 티토이즘, 유러커뮤니즘(Euro-Communism), 네오맑시즘(Neo-Marxism), 모택동주의, 김일성주의 등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왔다.

생각된다.

원래 “주체”라는 용어는 1955년 12월 28일에 당 선전선동원들 앞에서 행해진 김일성의 “당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함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다.³¹⁾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주체”의 의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당 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위에서의 김일성의 말에 의하면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란 바로 “조선혁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조선혁명이란 곧 김일성만이 추진할 수 있는 혁명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등장한 주체사상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 이론적인 형태를 띠면서, 1980년대에 와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김정일의 논문 등을 통하여 비교적 체계적 이론을 갖추게 되었다.³²⁾

31)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함에 대하여”, 「김일성 선집」, 제4권(1960), pp. 325~354.

그러나 김일성은 노동당 창건 40주년에 즈음한 연설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치 아래 혁명투쟁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된 것을 1926년의 「EC」(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이라고 함으로써 주체사상의 기원을 1955년의 연설이 아닌 1930년대의 항일무장 투쟁기에 두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로동신문」 1975년 10월 11일자 참조.

32) 전인영, “주체사상의 형성배경과 이론적 배경”, 「이념문제주보」(1988. 9. 29), No. 36, p. 52.

이렇게 볼 때 주체사상은 처음부터 체계와 골격을 갖춘 사상이라기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형성·발전되고 그 이론적 체계를 갖추게 된 사상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2. 主體思想의 內容과 體系

1) 主體思想의 成立段階

주체사상은 1955년의 연설에서 김일성이 “주체”의 확립문제에 관해 처음 언급한 이래 1966년부터는 이같은 주체사상의 지도입장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사상에서의 주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먼저 “정치에서의 자주”는 김일성이 그동안 지속되어온 내부적인 권력투쟁과 1959년경부터 일기 시작한 중·소간의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자구책으로 주장한 것이며,³³⁾ 이어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자주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취지아래 “경제에서의 자립”이 주장되었다. 또한 “국방에서의 자위”란 어떤 외부의 침략에도 자체의 힘으로 국가와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위력을 건설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³⁴⁾

그 이듬해인 1967년에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격으로 격상된 후 1970년 11월에 열린 제5차 당대회에서는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

33) 북한에서 “정치에서의 자주”가 공식 선언된 것은 1966년에 “자주성을 옹호하자”란 제하의 로동신문 사설에서였다(「로동신문」, 1966년 8월 12일).

34) 허동찬, “김일성 이후의 북한체제전망”, 「김일성 이후의 북한」(서울: 국토통일원, 1990), pp. 63~64.

와 함께 공식적인 당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이렇게 변천해 온 주체사상은 1982년 3월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하여 이른바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었다.

2) 주체사상의 主要內容 및 體系

주체사상의 요체는 「김일성어록」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 요약되어 있다.

- ① 주체사상의 본질은 한마디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 ② 주체사상의 기초, 즉 주체사상의 철학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 ③ 마지막으로 주체사상은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점인데, 이곳에서의 사람이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김일성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체사상이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고, 자주, 자립, 자위, 주체 등의 입장에서 자주적 민족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긍정적 사고방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자존의 입장을 견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³⁵⁾

그러나 주체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요소는³⁶⁾ 마르크스-레닌주의(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 입각하고 있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35) 전인영, 前揭論文, p. 53.

36) 박한식,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양성철·박한식, 「북한기행」(서울:한울, 1986), pp. 124~128.

정면으로 모순되는 내용인 것이다.³⁷⁾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민족주의적 요소를 도입·첨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을 남·북한의 공동의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으며, 주체사상이 등장할 당시의 남한에서는 토지개혁 이후 뚜렷한 프롤레타리아의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계층을 발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남한정부를 연결시킴으로써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이 남한에 괴뢰정권을 세우고 그들을 앞세워 계급착취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한시바빠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이른바 “민족해방”의 논리에 입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³⁸⁾

이렇게 북한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한 남한내의 소수 자본가 계급들을 북한 인민의 적으로 삼음으로써 북한 인민들에게 공동의 적에 대한 적개심과 남한 인민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동시에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 점이 바로 북한정권 유지의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와 지도적 원칙을 그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과 관련된 것을 세계관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근로인민

37)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보다 계급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인종이나 민족, 국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급의 동질성인 것이다.

38) 도홍렬, “북한의 사회변화와 주체사상”, 「통일연구논총」 제83호(1987), pp. 146~147.

대중의 운명문제에 가장 올바른 해답을 주기 위한 구성체계,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합법칙성과 함께 그 방도를 밝혀 주는 사상이론체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³⁹⁾

이같은 세가지 원리에 입각한 주체의 사상과 함께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전략전술로 구성되는 주체의 혁명이론⁴⁰⁾ 그리고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3대혁명소조운동 등으로 이루어지는 주체의 영도방법은 김일성주의, 즉 주체사상의 중요한 내용체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같은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사회를 개조함으로써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⁴¹⁾

3. 主體思想을 통한 權力基盤의 維持 및 強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최고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은 분단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北韓의 金日成 統治構造確立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왔으며, 국가 전반에 걸쳐 북한주민에게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강요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내에서 김일성이 주체사상이라는 통치이념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권력기반을 유지·강화하고 있는가⁴²⁾를 살펴보고자 한다.

39)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주체사상 총서3-」(백산서당, 1989), pp. 11~12.

40) 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는 사회주의 건설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제국주의론, 민족이론 등을 들 수 있다.

41) 김종표, 「1990년대의 한반도 통일환경변화연구」(서울: 국토통일원, 1989), pp. 9~13.

42) 김갑철,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김일성주의”(제4차 한·중학술회의 주제발표논문, 평화통일연구소, 1983), p. 26.

1) 體制의 正統性 確保

어떤 政治體制를 불문하고 그 체제의 정통성(legitimacy)을 확보하는 것은 체제유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즉 북한으로서는 정통성 확보 문제야말로 가장 화급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북한이 주체사상을 1930년대의 항일무장투쟁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 저의를 알 수 있다.⁴³⁾ 여기서 주체사상의 논리적 전개를 살펴보면 그들은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혁명의 주체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의미파악을 위해서는 다시 주체사상의 수령론⁴⁴⁾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말하는 ‘수령’이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는 달리 “인민대중의 최고 수뇌로서 역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과 혁명의 최고 영도자요 인민의 대표자로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사상을 창시하고 밝혀준 사상의 체현자”라는 것이다.⁴⁵⁾

이렇게 본다면 이들이 말하는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라는 말은 결국 유일적 혁명사상을 창시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은 인민대중만이 혁명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니 이를 달리 말하면, 인민대중을 선도하는 수령이 혁명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 된다.

북한은 이같은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6.25전쟁 이후의 복구건설 시기에 로동당내의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 ‘주체’를 내세워 당내의 종파분자를 숙청함

43) 도홍렬, 前揭論文, p. 148.

44) 정우곤, “주체사상의 혁명적 수령론 연구”, 「통일문제연구」제6권, 제1호(1990. 봄), pp. 181~201.

45) 김시완, “주체사상의 이론구조와 이데올로기적 기능분석(Ⅱ)”, 「북한」(1988년 8월호), p. 117.

으로써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던 것이다.

2) 大衆動員의 機能

主體思想은 북한에서 대중동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 이후에 있어서 사회 전분야에 걸친 매우 중요한 대중동원의⁴⁶⁾ 수단이 되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기능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즉 북한은 휴전 이후 1958년에 이르기까지 사유재산제를 전면 폐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윤동기를 상실한 근로자들의 생산의욕 저하를 막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북한은 본격적인 동원체제로 들어서고, 이 같은 대중동원에 주체사상은 아주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북한에서는 대중을 동원하는 데에 행정적인 방법이나 물질적인 유인에 의한 방법보다도 “정치사업을 통하여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자각을 하고 혁명의 주인답게 참여하도록 정치사상적으로 발동시키는 방법만이 참다운 혁명적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대중을 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을 시킬 수 있을 때에 효율적인 대중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이와 같은 주체사상의 군중노선(mass line)에 입각한 대중동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천리마 운동’,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운동’ 등을 들 수 있는데⁴⁸⁾ 북한에서는 이러한 군중노선을 가리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혁명적 사업과 인

46) 일반적으로 동원이란 행동단위의 잠재적 에너지를 집단행동에 이용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A Theory of Social and Political Process*(New York: The Free Press), pp. 388~390.

47) 도홍렬, 前揭論文, p. 151

48) 김창순, “북한 통치이데올로기가 사회변화에 미친 영향”, 「북한 통치이데올로기 연구」(성남: 정신문화연구원, 1984), pp. 116~118.

민적 사업작품”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3) 對南革命戰略의 合理化

북한의 이른바 ‘조국 해방론’이란 단순한 남북한의 통합이라기 보다는 남한을 사회주의체제화시킴으로써 북한체제내로 흡수시키고자 하는 대남혁명의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은 당연히 민족자주성에 입각한 북한을 가장 이상적인 자주국가로 묘사하고 있으며, 반면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은 가장 비자주적인 체제라고 규정하여 선전하고 있다. 결국 북한 인민들에게는 미군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남한지역을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제로 부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은 북한인민들에게 강렬한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⁴⁹⁾ 즉 김일성이 북한을 현재까지 통치할 수 있었던 것도 반일·반미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보는 견해는 이제 일반적이다.

또한 북한의 내부에 민족감정을 자극하고 민족적 자긍심과 우월감을 부추켜 북한정권을 합리화시키고 북한지역내에서의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결국 그들의 대남 혁명전략의 주요 내용인 3대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⁵⁰⁾

4) 權力世襲의 合理化

주체사상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세가지 기능외에 김정일에 의한 권력세습을 합리화시켜 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사회내에서 김일성이라는 존재는 다른 국가에 있는 일반적인

49) 김시완, 前揭論文, p. 183 ; 박한식, 前揭論文, p. 124.

50) 김시완, 上揭論文, pp. 183~184.

정치지도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김일성은 신의 화신이며, 국가와 민족의 태양이고, 분신이며, 그의 통치력은 가히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이른바 김일성의 후계자로서의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인 i) 그에게 절대 충성하고, ii) 그의 사상에 정통하고, iii) 새 세대의 인물이며, iv) 고매한 덕성을 가졌고, v)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⁵¹⁾이라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수령의 위대한 혁명과업은 한 세대에서는 완성될 수 없고 대를 이어 수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결부시켜 본다면, 이러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였고, 아버지인 김일성의 고매한 덕성과 지도력을 계승하였으며, 문화·사상·정치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김일성의 장자인 김정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김정일만이 후계자로서의 조건을 손색없이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부자권력세습을 합리화시키고 있으며, 이때 주체사상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第3節 金日成體制의 特性

1. 로동당 1黨의 支配體制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력구조상의 특징은 공산당이 모든 권력의 궁극적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북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의 권력구조가 타공산국가와 다른 점은 공산당(즉 로동당)이 완

51) 양성철·박한식 편저, 前揭書, pp. 62~63.

전히 김일성의 사당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위치하여 김일성의 말과 교시는 최고규범인 헌법도 초월할 수 있다는 완벽한 1인독재체제라는 점이다. 즉 북한의 권력구조는 외형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입법부),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행정부) 및 중앙재판소(사법부)로 구성되어 있어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형적인 1당1인 독재체제로서 유일한 정당인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참모부로서 모든 국가기관이나 정치조직에 대한 '향도적 영도'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당적 영도체제'하에서 당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김일성)'이 당의 총비서와 국가주석을 겸임하게 되어 있어 당과 국가기관을 일원적으로 지도·통제할 수 있는 국가권력구조의 최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바, 그 정치체계도를 보면 <표 2>와 같다.

이하 북한의 주요통치구조에 대해 그 대강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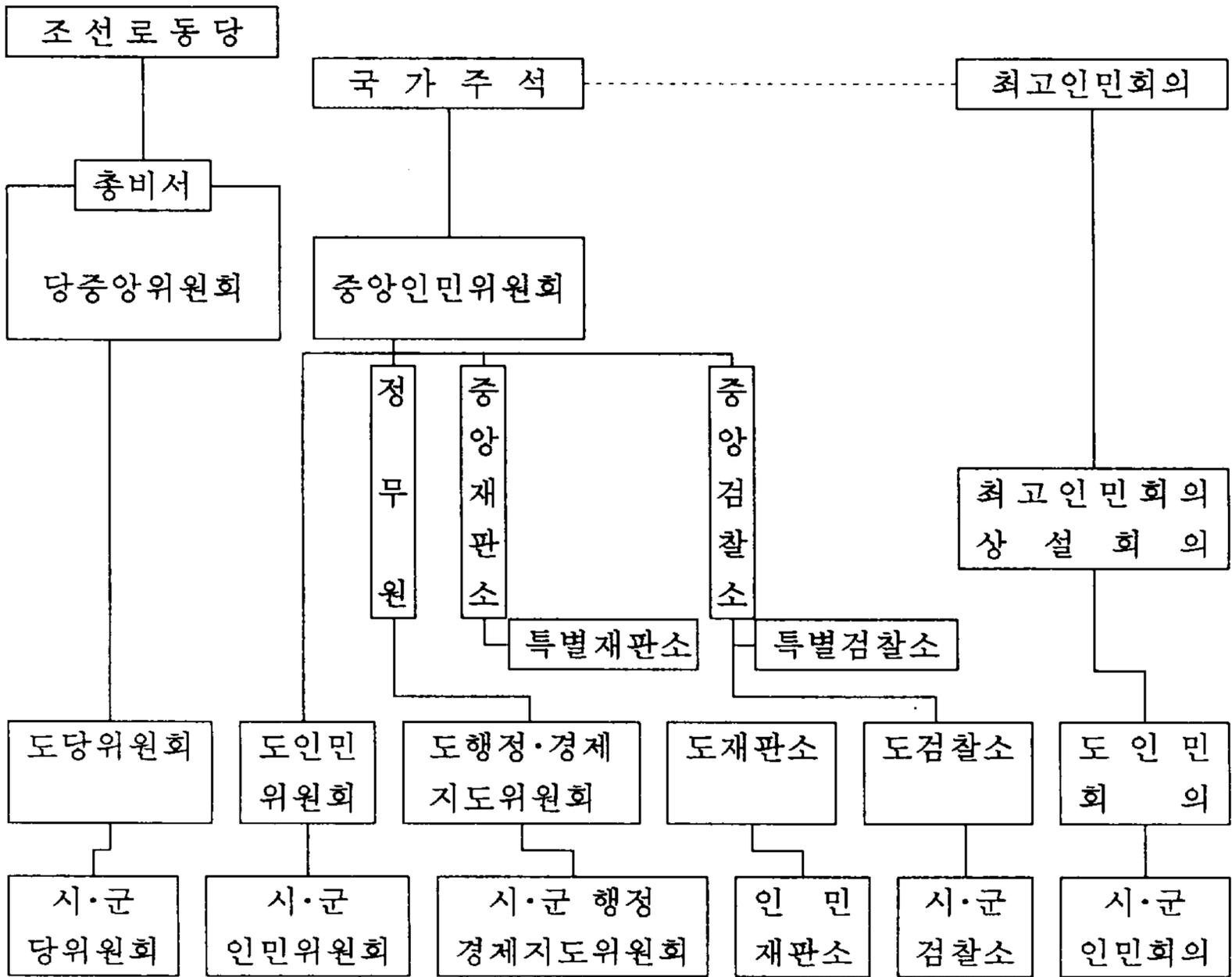
1) 조선로동당

북한의 정치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조선로동당이 모든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다.⁵²⁾ 따라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정무원, 중앙재판소 등은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고 단지 조선로동당이 지시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예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北韓의 조선로동당은 194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에 평양에서 개최된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 마지막 날에 '朝鮮共產黨 北朝鮮 分國'이 '조선로동당'의 모체가 되어 탄생되었다.⁵³⁾

52) 당이 국가조직보다 우월한 체제를 리그비(T. H. Rigby)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라고 부른다. T. H. Rigby, *Communist Party Membership in the USSR, 1917-1967*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p. 2.

53) 「조선중앙연감」, 1990, p. 715.

〈表 2〉 北韓政治體系圖



資料：민족통일중앙협의회, 「북한편람」, 1990

조선로동당의 最高機關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대회 기간에는 당 중앙위원회가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위원회는 規約上 6개월마다 전원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全員會議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

결국 이렇게 볼 때 北韓에서 모든 중요 정책결정은 정치국, 그 중에서도 최

고 실력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⁵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조선로동당은 당대회 산하에 중앙위원회, 中央檢査委員會, 中央軍事委員會를 두고 있으며, 중앙위원회는 다시 인사 및 당면문제의 토의·결정을 담당하는 비서국과 무장력 강화 및 군수산업발전사업을 지도하는 中央調查委員會 및 당재정과 당대회에 사업총화를 보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中央檢査委員會로 구성되어 있다.⁵⁵⁾

2) 국가기관

北韓은 실제에 있어서는 당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식상으로 立法部·行政部·司法部에 해당하는 기구가 모두 있으며, 지방의회 및 각종의 특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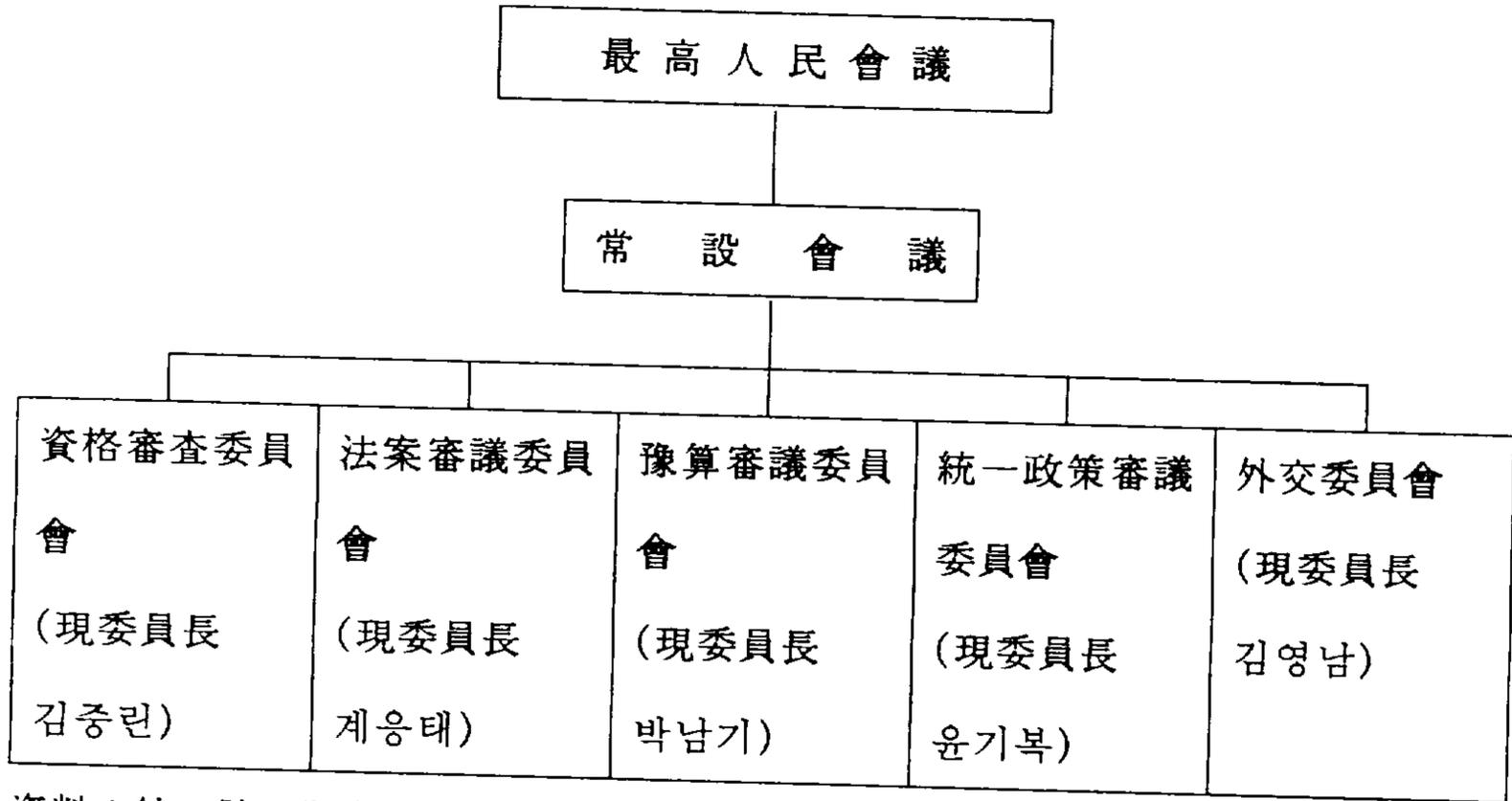
(1) 최고인민회의

北韓에서는 입법기관을 ‘人民會議’라고 부르고 있는데 중앙입법기관이 바로 최고인민회의이다. 最高人民會議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규상으로는 헌법의 채택·수정, 주요정책과 기본정책의 기본원칙 수정, 주석·부주석·정무원총리·中央裁判所長 등의 선거, 국가예산승인 등과 같은 중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로동당이 결성한 정책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기구는 <表 3>과 같다.

54)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북한의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기구로서 처음에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김일, 이종욱의 5인으로 구성되었다가 이종욱이 탈락하고 김일이 사망함으로써 현재 북한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은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뿐이다.

55) 김일성은 비서국의 총비서직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동시에 겸임하고 있다.

〈表 3〉 最高人民會議 機構表



資料：統一院，北韓概要，1991

(2) 國家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

현재 김일성이 주석으로 되어 있는 국가주석제는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新設된 제도로써 최고인민회의에서 4년마다 선출되어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후계세습구축을 위한 작업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⁵⁶⁾ 또한 主席制와 함께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설치된 중앙인민위원회는 산하에 대내·대외정책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및 사법안전위원회를 두고 있고 市·道·郡 單位에 지방인민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인민위원회는 구성원이 2/3이상이 당 政治局 正委員 및 후보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질

56) 북한의 헌법상 주석은 ① 국가의 수반으로 국가주권을 대표하고 ②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首位)이며, ③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위원장직을 겸임하도록 되어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적으로 당 지도부가 中央人民委員會라는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정무원

현행 北韓의 사회주의헌법에 의하면 정무원은 구헌법에서의 내각을 개칭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권한면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축소되어 國家主席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통제하에 행정집행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정무원은 北韓 헌법에 의하면 ① 각 위원회 지방위원회·도경제지도위원회 사업의 지도 ② 人民經濟計劃作成 및 대외사업의 수행 ③ 社會秩序維持 및 國家利益의 보호 등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⁵⁷⁾ 총리·부총리, 14개 委員會, 25부, 1상사, 1은행, 2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재판소와 검찰소

北韓의 司法機關으로서는 일반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있으며, 그 중 일반재판소에는 中央裁判所, 道裁判所 및 시·군의 인민재판소가 있다.

또한 검찰기관으로서는 중앙검찰소, 道·市·郡檢察所 및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는 각기 자기 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라는 기구를 중앙과 道·市·郡 單位에 設置하여 주민에 대한 法的 統制 任務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5) 국가정치보위부와 3대혁명소조

國家政治保衛部는 1973년에 정무원 산하부서인 사회안전부의 기능중에서

57) 북한헌법, 제109조.

정치보위기능만을 독립시켜서 설치한 기구로서 정무원이 아닌 中央人民委員會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다.

또한 3대혁명소조란 197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 憲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1973년 2월에 개최된 로동당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어 각급 생산단위에 파견된 조직으로서, 그 구성원들은 로동당원, 각급학교 교직원, 대학졸업자, 각급공장의 기술자 및 과학자들 중에서 選拔되며, 지도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20~50여명의 규모로 구성되는 組織이다.⁵⁸⁾

58)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북한편람」(서울: 1990), p. 25.

3대혁명소조의 규모는 대체로 공장기업소에 20~30명씩, 그리고 큰 공장이나 기업소에는 50명씩 파견하기로 했다고 한다. ; 이정수, “김정일 세습체제의 구조적 특징”, 「통일문제연구」(서울: 통일연구소, 1985), pp. 202~203.

2. 金日成 父子世襲體制

1) 世襲體制的 登場背景과 構築過程

1917년 러시아 혁명이래 70여년간의 공산주의 정치사에서 장기독재를 누렸던 예는 많다. 유고의 티토가 35년, 소련의 스탈린이 31년, 중국의 모택동이 27년 동안이며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는 24년동안 권좌에 군림하였다.⁵⁹⁾ 그러나 이들의 장기 집권도 반세기에 가까운 46년을 統治해 오고 있는 김일성의 長期獨裁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金日成의 이같은 최장기 執權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독재자들과 달리 50~60년대에 걸친 피의 숙청과 철저한 주민통제사업을 통한 개인 우상화정책에 의한 神政體制를 구축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김일성은 그의 執權期間동안 수많은 독재자들의 權力承繼過程에서 발생했던 암투와 갈등, 혼란 등의 실제 사례들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그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하였다는 점을 동시에 보아왔다. 따라서 김일성으로서는 이같은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사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김일성주의”라는 이념을 날조하여 이것을 “대를 이어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부자세습체제의 구축은 그동안 이루어온 金日成 자신의 우상화·신격화를 자신이 죽은 후에도 유지·존속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1917년의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명멸해간 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부자세습체제의 구축이 北韓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北韓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9) 북한연구소, 「김일성 통치 46년—오늘의 북한실상」(서울: 북한연구소, 1991), p. 5.

현재의 北韓政治體制는 사회주의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에 바탕을 둔 카리스마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일종의 왕조체제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北韓은 분단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閉鎖體制를 유지해 오고 “주체사상”이라는 정치적 상징조작을 통해 주민들을 억압·통치해 오면서 北韓體制의 優越性을 注入·교육시켜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思考能力과 비판능력은 거의 상실된 상태이고 그 속에서 김일성만이 유일하고도 신성한 존재로서 군림해 오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이미 1970년대 중반경부터 김일성 부자세습체제의 구축을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權力上層部의 인물들과 김일성 족벌내의 주요인물들에 대한 제거작업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권력의 상층부에서 제거 또는 잠적한 인물들만 보더라도 1975년에 黨政治局 후보위원이었던 오태봉과 유장식이 제거되었고, 1977년에는 軍總政治局長이었던 이용무와 부주석 김동규 및 인민무력부 부부장이었던 장정환이 제거되었다. 또한 1979년에는 인민군 제 1 부총참모장이었던 김철만이, 그리고 1982년에 國家保衛部長 김병하, 재정부장 김경련, 부총리겸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최재우가 잠적하거나 除去되었다.⁶⁰⁾

이같은 숙청작업은 김일성의 족벌내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가해지는데, 이는 주로 김정일의 계모인 김성애측 인물들에 대한 숙청 및 격하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먼저 김성애는 1963년 김일성과 결혼한 후 1965년에 女性聯盟副委員長을 출발로 1970년에 中央委員, 1971년 여맹위원장을 거쳐 1972년에는 제 5기 최고인민회의 代議員에 선출되는 등 지속적인 승진을 하는 듯이 보였

60) 국토통일원, 「김일성 부자세습체제의 정책방향」(서울: 국토통일원, 1984), p. 10.

으나, 외형적인 지위향상과 달리 실질적인 당내서열은 5차 당대회 때는 23위였던 그녀의 서열이 6차 당대회에서는 105위로 격하되었다. 또한 김성애의 오빠이며 김일성, 최현 등과 만주에서 빨치산운동을 함께 하였던 김광협이 1970년의 제 5 차 당대회에서 축출되었고, 김일성의 親동생이자 김일성의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받던 김영주도 1975년 4월이후 부총리직에서 해임되면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김정일은 현재 공식적으로 당정치국 상임위원회 서열 제 2 위이며, 당비서 서열 2위, 군사위원회 서열 2위 등을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김일성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실권자로 부상하였으며,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 6 차 당대회에서 만경대학원과 김일성대학 출신 중에서 친김정일세력을 당정치국에 30%, 당조사위원회에 30%, 당중앙위원회에 20% 정도를 진출시킴으로써 후계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⁶¹⁾

2) 金父子世襲體制에 대한 PR政策

1980년대에 들어서 김정일에 대한 권력세습체제 구축작업과 함께 北韓에서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그 작업 내용은 i) 호칭을 통한 이상화, ii) 김일성과 같은 차원의 신격화를 통한 이상화, iii) 공적찬양을 통한 이상화, iv) 해외의 친북 단체를 통한 이상화 v) 기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61) 실제로 이 당시의 권력구조 개편내용을 보면, 중앙위원 248명중 139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고, 37명의 정치국원 중 10명이, 군사위원 16명 중 6명 및 248명의 중앙위원 중 49명이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자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김정일의 측근 인물들의 부상을 엿볼 수 있다.

(1) 호칭을 통한 이상화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 책동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은 김정일에 대한 호칭의 변화에서 읽어 볼 수 있다. 김정일에 대한 호칭은 후계세습체제 구축의 초기 단계에는 「당중앙」이라는 막연한 대명사로서 김정일을 지칭하였고 이외에도 「향도의 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김정일을 신비한 인물로 승화시키면서 권력승계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호칭 역시 보다 구체화되어갔다. 즉 1973년의 ‘존중하고 경애하는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 1977년에는 ‘공산주의의 미래의 태양’, 1978년부터는 ‘걸출한 영웅’, 1980년에는 ‘은혜로운 햇빛’, 1982년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로, 1984년에는 ‘최고사령관’등의 호칭이 만발해 왔고,⁶²⁾ 특히 김정일의 성명 아래에는 ‘각하’라든가 ‘지도자 동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하나의 首領’이라는 마치 세습체제구축작업이 완료된 것과 같은 극존칭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2) 신격화를 통한 이상화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는 1980년의 제 6 차 당대회를 계기로 사실상 김일성과 같은 수준의 신격화 단계로 돌입하였다. 예컨대 ‘향도성의 빛발이 지나면, 그곳은 금방 옥토로 변한다’라든가 ‘옛날에는 수령님이 축지법을 쓰셨는데 오늘에는 주체의 별님이 땅을 넓히는 천지확장술과 시간을 주름잡는 축지법을 쓰신다’라고 하기도 하고, ‘앞은뱅이도 서게 하며 장님도 눈을 뜨게 하는 신통력을 가졌다’⁶³⁾는 등의 표현으로 김정일에 대한 신격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62) 박승영, “북한의 김정일 권력승계정책에 관한 체계론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63) 국토통일원, 「김정일 부자세습체제의 정책방향」(1984. 2), p. 17~19.

‘김정일이 손을 한번 쳐들기만 하면 순식간에 공장이 일어서고 노적가리가 솟아나고, 또 그 분을 한번 만나고 오면 평범한 농부가 교사가 되고, 장수로도 된다’고 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민족민주전선(85. 7. 舊 “통혁당”을 개칭)이 朝鮮勞動黨 창건 46주년을 맞아 김일성 부자에게 보냈다는 축하문에서 김정일의 뛰어난 능력을 과장선전하고 있다. 이같은 신격화는 이미 김일성에 대해 수 없이 사용되어온 방법에 불과하지만 김정일에 의한 후계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민의 지지를 유도해 내는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3) 공적찬양을 통한 이상화

北韓에서 김정일이 가시적인 후계자로 부상한 것은 70년대이다. 이러한 후계자 이미지 형상화작업을 거쳐 실제화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정일의 공식적인 정치활동은 1980년 12월 19일 사회안전부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때부터이며, 실무지도는 1981년 5월에 김일성을 따라서 묘향산지구 개발공사현장으로 시찰을 나간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3년 9월의 검덕광산 제3선광장 준공식 보고에서는 “수령님의 영명한 방침과 지도자동지의 모범적인 지도에 의해 이룩되었다”고 찬양하였으며, 평양시 창광거리 주변의 고층건물에는 “김정일의 대담한 결단”이 아니었다면 이룩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찬양하였다.⁶⁴⁾ 이밖에도 北韓의 朝鮮勞動黨은 김정일이 그동안 당의 확대·강화·발전을 위해 발표하였다는 각종 연설이나 서한·담화 등을 단행본과 문헌집 등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김정일이 “勞動黨을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의 한 길로 향도하는 백전백승의 위대한 당으로

64) 국토통일원, 上揭書, p. 18.

발전시키는데 있어 불멸의 공헌을 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4) 해외의 친북단체를 통한 이상화

北韓은 특히 외국의 親北韓團體를 사주하여 1981년 11월에는 일본의 재일 조선인총연맹으로 하여금 “金正日世襲體制支持 강연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인도에서 “김정일 위대성 강연회”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김정일에 대한 축전을 보내도록 종용해 왔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신문광고를 통하여 “김정일은 나폴레옹만큼 키가 작고 시이저만큼 思考力이 깊으며, 알렉산더 대왕처럼 정열적”이라고 선전함으로써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5) 기 타

위에서 언급한 方法 이외에도 1975년부터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경축하고 있으며, 北韓의 각 지역과 각급 공장기업소안에 “김정일 사적관”과 “김정일 學習研究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를 이어 충성하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등과 같은 60여곡의 김정일 찬양가곡집과 김정일의 어린시절의 치적을 찬양한 100여종에 달하는 作品을 수록한 “영원한 성좌”라는 책을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金日成選集”과 같은 “인민의 지도자”라는 金正日의 말과 행동을 집대성해 놓은 문집을 연속물로 내놓는가 하면 김정일을 칭송하는 감동깊은 전설을 국내외에서 수집하여 「김정일 전설집」을 발간하는 등 金正日을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존재로 부각시켜 그를 중심으로 한 內部結束의 強化를 圖謀하고 있다.

3. 主體思想에 의한 統治體制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이 “위대한 주체적 사상이론체계”이며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실정에 맞게 創造적으로 적용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 革命思想의 구성요소는 i) 主體思想을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思想理論體系, ii) 혁명투쟁 이론과 戰略戰術, iii)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科學的 學術, iv)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영도원칙, v) 혁명과 군중노선에 관한 이론으로 되어 있다.

한편 黨의 唯一思想체계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黨의 영도를 강화하는 最高原則이며 이것은 i) 首領의 혁명사상으로 全黨이 무장하고, ii)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 통일하며, iii) 수령의 唯一的 영도 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김일성 혁명사상은 黨 唯一思想體系의 제1차적 구성요소라고 본다. 이리하여 김일성은 “우리 黨의 革命思想, 黨의 唯一思想의 진수를 이루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인 主體思想이며 우리 黨의 唯一思想體系는 주체사상체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理論體系는 1967년에 와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분야에 걸쳐 응용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 와서는 理論적으로 體系화된 이래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지배·지도원리가 되어왔다.⁶⁵⁾

이러한 唯一思想體系는 김정일 세습체제로 이어지면서 더욱 강화되었고 또 東歐의 改革·開放의 움직임과 함께 각종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하여 固守하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推進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식대로 살자는 것이다. 「우리식대로 살자」는 1980년

65) 국토통일원, 「북한의 정치체제와 행정정책에 관한 연구」(1989), pp. 42~43.

10월 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연설을 통하여 “主體를 튼튼히 세워 혁명위업을 完守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한데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캠페인이 벌어진 것은 1980년말 경부터이다.

1988년 1월 26일자 로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그들을 반대하는 전쟁 책동과 思想, 文化的 공세로 말미암아 정세가 더욱 긴장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은 환경속에서 난관을 이겨내고, 革命과 建設을 전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식대로 살자는 黨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정세하에서 우리식대로 革命과 建設을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黨, 대중의 혈연적 통일단결을 공고히 다져야 하며, 현재 닥치고 있는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주체적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政治, 經濟, 文化 등 모든 分野에서 우리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식이란 항일 빨치산 식이며, 과거 빨치산 운동시 부하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지어는 목숨바쳐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오르지 金日成과 金正日을 위하여 충성을 다바쳐야 하며 바로 그것이 우리식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統治體制의 모순에서부터 부패·타락한 權力의 형태와 충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한정으로 강요되는 무보수 노동과 배급제 생활 등을 우리식이라는 말로 合理化시킨 것이다.

이렇게 北韓政權이 最近 「우리식대로 살자」를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對外的으로 急變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영향, 특히 중·소의 改革·開放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對外的으로는 平祝(1989년 7월)이후 외부 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

은 궁여지책임을 알 수 있다.⁶⁶⁾

특히 蘇聯보수파에 의한 쿠데타가 불과 3일천하로 끝나게 되고 이의 여파로 蘇聯공산당이 붕괴되는 새로운 사태에 직면해 北韓은 전혀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즉 北韓은 「社會主義의 역사적 필연」이라는 일반론과 함께 北韓社會主義의 우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춘 선동논조를 통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자극하는 한편 體制固守를 위한 갖가지 형태의 대중조작을 전개함으로써 공산종주국 蘇聯에서의 공산당 몰락의 여파가 北韓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蘇聯 쿠데타 실패 이후 중국이 社會主義固守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고무되어, 중국의 입장을 연일 보도하고 있는 것이나 金正日을 중심으로 社會主義體制를 固守해 나가자는 내용의 가요 「사회주의를 지키세」를 주민들이 일과 시작 전·후나 작업 도중에 부르도록 독려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北韓은 또한 體制固守를 위해 북한사회주의의 우월성 선전과 함께 金父子에 대한 충성심을 促求하거나 주민들의 긴장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對韓·美 비난 선전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중조작을 꾀하고 있다.

金父子에 대한 충성심 促求는 마치 蘇聯쿠데타 기간 중에 있었던 청년절 행사를 통해 더욱 強化됐는데, 지난 9월 1일에는 平壤에서 金正日이 청년절을 기해 북한청년들에게 보낸 「서한」을 관철하기 위한 대규모 선동집회를 열고 청년학생들이 金父子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함으로써 社會主義體制 固守에 앞장설 것을 促求하기도 했다. 金正日의 「서한」은 청년들이

66) 통일원, 「통일문답」, 1991, pp. 234~235.

黨과 수령에 충직한 전위로서 社會主義體制固守에 앞장설 것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9월 1일 일제히 열린 各級 학교의 개학식에서도 黨祕書·부총리 등 黨·政高位幹部들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전체 학생들이 『金日成父子 있으므로 오늘의 행복과 未來의 繁榮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金父子에게 충직한 「충성동이」·「효자동이」가 될 것을 강조했다.⁶⁷⁾

67)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제706호(1991. 9. 1)참조

第3章 北韓體制變化에 대한 壓力要因

第1節 內部的 壓力要因

1. 金日成體制的 問題點

마르크스(K. Marx)와 엥겔스(F. Engels)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최고도로 발달한 상태에서 자체내의 社會·經濟的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나, 共產化된 국가들의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이 점에 관해 레닌과 스탈린은 현실적으로 同時革命에 의한 세계공산화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먼저 서구의 몇개국만이라도 사회주의 혁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소련을 “세계혁명을 위한 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共產主義의 신화는 이미 붕괴하고 있다. 고르바초프(Gorbachev)도 1990년 7월의 소련공산당 제28차대회의 報告演說을 통해 과거의 스탈린식 社會主義가 정치적으로 人權을 말살하는 一黨獨裁體制下에서 경제적으로는 權威主義的 官僚主義의 특성으로 인해 자유경쟁권을 박탈하고 실질적 소유자인 勞動者를 소외시켜 왔음을 비판하면서 자유선거와 多黨制에 立脚하여 人權을 尊重하고 시장원리의 도입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후 소련을 비롯한 東歐圈國家들은 政治的으로는 민주화를, 경제적으로는 市場經濟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까지도 교조적인 스탈린식 社會主義 路線과 體制를 그대로 踏襲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金日成體制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金日成 體制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政治的 問題

共產主義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있는 問題點은 바로 共產黨의 官僚主義化 현상인 바,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즉 북한사회 역시 金日成 1인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해 상하계층간의 不協和音, 業務의 非效率的·非生産的인 체제, 이른바 “번문욕례”라 불리어지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점 때문에 金日成은 북한 정권수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조직이나 체제 정비작업, 인사개편 등의 방법을 통해 정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김일성=神」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공산당원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행정행위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공산당원과 비공산당원, 특권층과 비특권층간의 불협화음은 다른 어떤 공산국가보다도 심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⁶⁸⁾으로 보인다.

2) 經濟的 問題

한국전쟁 이후 1960년경까지만 해도 북한의 經濟成長率은 남한보다 높았으나, 1973년을 기점으로 1인당 GNP가 남한보다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북

68) 알렉산더 제빈, 「평양, 서울 그리고 모스크바 : 타스통신 특파원의 남북체험 8년」(동아일보사, 1991), pp. 71~100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둔화되어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남북한 간 경제력의 격차는 현격하게 벌어졌다. 즉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한의 1인당 GNP는 북한의 5배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약 2배인 것을 고려한다면 GNP는 남한이 북한의 10배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들어 소련의 원유 등을 비롯한 원조의 중단과 기상조건의 악화 등은 북한의 경제沈滯를 더욱 부채질하여 현재 北韓은 經濟全般에 걸쳐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表 4> 南北韓의 經濟現況 比較

(1990年末 基準)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人 口	千名	42,793	21,720
人 口 增 加 率	%	0.97	1.61
面 積	千km ²	99.3	122.1
GNP	億弗	2,379	231
1 人 當 GNP	弗	5,569	1,064
經 濟 成 長 率	%	9.0	-3.7
軍 事 費 / GNP	%	4.1	21.5
對 美 換 率	원	707.97	2.14
財 政 規 模	億弗	388	166
豫 算 / GNP	%	16.3	71.9
軍 事 費 支 出	億弗	97.3	49.6
軍 事 費 / 財 政 規 模	%	25.1	29.9
財 政 增 加 率	%	26.7	6.4

資料：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 1991

이와 같이 북한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과도한 軍事費 支出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교조적 共產主義體制하에서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은 GNP에 비해 軍事費 支出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는 점인데,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비는 GNP의 2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우리의 97.3억불의 절반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뭏든 북한의 軍事費 支出은 西方國家들의 GNP에 비할 때 共產國家들 중에서도 특히 더 과도한 軍事費 支出을 해왔음을 推論해 볼 수 있다.

이같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계속해서 북한의 國民經濟를 좀먹고 住民生活를 어렵게 함으로써 國民不滿의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北韓經濟의 問題點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과의 軍事力 競爭을 위해 外債를 도입하면서까지 軍事力을 增強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극한 狀況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北韓體制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問題點은 북한이 소련의 援助中斷과 中國의 無能力과 함께 대외신용도의 추락으로 인해 더이상 外債를 조달할 能力이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향후 劃期的인 措置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北韓經濟를 더욱더 침체의 수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要因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3) 社會的 問題

일당독재와 강압에 의한 스탈린식 공산주의체제는 초창기에는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한 때 우위를 점하기도 하였으나 얼마 안있어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에는 그 대안으로 리베르만(Liberman)

방식을 비롯한 많은 시장원리와 이윤동기를 도입하는 등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만큼은 예외였다. 물론 1984년에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모델로 한 합영법을 제정하여 서구의 資本과 技術의 誘致努力을 기울이기도 했으나 對外信用度 추락과 근본적인 體制改革이 없는 法律制定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지금까지 북한이 사용하여 온 生産能率向上을 위한 思想教育이나 強制勞動方式은 이미 그 效用성이 상실되어가고 있고, 創意性 박탈, 과도한 肉體勞動 및 생활의 窮乏化로 인해 북한주민의 생산의욕은 날로 低下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주민의 생산의욕저하 때문에 북한의 경제성장율은 작년에 $\Delta 3.4\%$ 성장률을 기록⁶⁹⁾하였고 內外通信에 의하면, 최근 북한은 「하루 두끼 먹기운동」 전개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⁷⁰⁾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김일성에 의한 教條主義體制는 이제 그 限界에 다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金正日 後繼體制의 問題點

金日成은 執權 이후 오늘날까지 정적에 대한 무자비한 肅清과 역사의 歪曲, 捏造 및 우상화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철저한 閉鎖體制를 유지함으로써 정권 유지에 성공해 왔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급격한 經濟沈滯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은 과거의 抗日武裝鬪爭 經歷 등과 철저한 外勢排擊 등을 통해 이룩한 카리스마에 의해 劃期的인 突發사건이 없는 한 그가 自然死할 때까지 계속 정권을 유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어진다.

69) 통일원, 북한경제력 종합평가, 1991.

70)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제760호(1991. 9. 1), pp. 10~11을 주로 참조하였음.

그러나 金日成에 비해 金正日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다르다. 즉 金正日是 개인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金日成에 비해 指導力을 비롯한 總體的인 능력면에서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김일성과 같이 抗日武裝鬪爭의 經歷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는 金日成의 아들이라는 것 뿐이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1970년대 이후 金正日에 대한 大的인 선전과 偶像化 作業을 벌여왔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權限掌握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거의 완비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북한에서 金正日이 金日成이 가졌던 카리스마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金日成이 죽은 후에 金正日이 金日成이 가졌던 權限을 고스란히 접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懷疑的인 見解가 支配的이다.

그런데 現在의 北韓經濟 沈滯의 양상은 예외가 없는 한 빠른 시일내 쉽게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이러한 북한의 經濟沈滯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金正日이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로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김일성에 비해 훨씬 취약한 권력기반 위에 서게 될 金正日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經濟沈滯에 따른 주민의 生活苦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할 운명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이 점에 있어서 역시 金正日의 行動半徑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金日成이 죽은 후 혹은 政治 一線에서 물러난 후 출범하게 될 金正日 後繼體制가 안게 될 問題點과 限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現代國家에 있어서 共產圈內에서 조차 유례없는 父子世襲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國際的으로 정권의 正統性에 致命傷을 입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압력 그리고 이들 국가 못지않게 큰 10년 이상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해왔던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개방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金正日은 權力을 승계한 후에 결국 金日成體制하에서 累積되어온 모든 問題點들이 일시에 폭발할 수도 있는 狀況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第2節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른 外部的 壓力要因

1. 美·蘇 兩極體制의 崩壞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었던 미·소 중심의 냉전구도는 1980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차츰 弱化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90년대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부터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核軍縮協商의 進展과 함께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예견조차 할 수 없었던 東·西 兩陣營間에는 和解·協力構圖를 示現하고 있다.

이러한 美·蘇 和解政策에 따라 동·서 양진영간에 첨예한 대결·대립을 형성해 왔던 兩極構圖는 붕괴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다음과 같은 세계조류의 특성을 적극 수용하려는 정책을 채택·수립하게 되었다. 즉 新秩序의 특징⁷¹⁾은 첫째, 冷戰體制시 兩軸이었던 美·蘇의 위상이 퇴락하고 그들의 位相定立에 결정요인이었던 軍事力의 重要性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개별국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둘째, 兩極體制에서 體制競爭의 결과로 노정되었던 제로섬(Zero-Sum)적 사고가 共存論理로 대체되고, 셋째, 이데올로기 대립을 탈피하여 實利追求 外交戰略으로 移行하고 있다는 점이다.

71) 한국일보, 1991. 1. 15.

우선 이와 같은 新秩序의 近因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자. 사실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의 성공 이래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지켜왔으나, 미국과의 대결구도 지속으로 인한 경제력의 낙후, 공산체제 자체의 모순과 불합리성, 극심한 관료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位相이 흔들리게 되었다. 체르넨코의 사망 후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한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소련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新思考에 입각한 페레스트로이카(開放), 글라스노스트(改革)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게 되었다.⁷²⁾

반면 자유진영국가의 盟主였던 미국 역시 80년대에 진입하면서 대내외정책의 수행상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세계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최고가치의 달성을 위해 소련과의 냉전의 틀속에서 군비경쟁을 해왔던 미국은 해외주둔군 및 설비의 유지에서 오는 과도한 군비부담으로 인해 재정·무역부분에서의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회 및 미국국민들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Great America”의 再現을 표방하면서 집권한 레이건 행정부시기에 있어서 미국의 위상은, 비록 대외정책수행면에서는 확실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대내정책의 수행면에서는 의회와 국민으로부터 매우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미국과 소련은 공히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타결점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것의 효시가 바로 과감한 軍縮의 履行이었던 것이다. 즉 미·소 兩頂上은 지난 87년 12월 워싱턴에서의 회담에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INF (Intermediate Nuclear Forces) 폐기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듬해 12월에는 지중해

72) 통일원, 「소련의 개혁·개방과 한반도」(서울, 1989), pp. 17~18.

의 한 섬인 몰타에서 「Post-Yalta時代」의 개막을 豫告하는 新紀元을 이룩하게 된 것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부시행정부가 출범하였고, 이 새로운 정권 역시 소련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동·서 양진영간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회담을 계속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의 대표적 예가 바로 지난 91년 2월 Gulf戰 발발시 보여주었던 이라크 응징에 공동보조를 맞춘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91년 9월, 10월 미·소의 최고지도자에 의해 전격적으로 발표된 핵무기의 일방적 폐기선언과 해외주둔군 철수조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리하여 전세계의 질서구도는 대립·경쟁의 냉전구도가 완전히 붕괴되고, 동·서 양진영 국가들간의 빈번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그들 스스로의 國益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脫이데올로기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미·소 양극구도의 붕괴로 인해 형성된 동·서 협력조류는 主體思想에 입각한 1인 장기독재정치를 행해오고 있는 북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최대후원국이자 동맹국이었던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추진은 우리와의 공식수교로 나타났고, 동유럽 모든 국가들 역시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 인해 북한의 외교적 입지는 매우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받는 타격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시대적 潮流를 거역할 수 없으며, 지난 91년 9월 「하나의 조선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UN가입을 실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소 양극체제의 붕괴는 「우리식대로 살기」방식의 自力更生노선을 표방하는 北韓에게 있어서는 체제의 변화를 이행하게 하는 가장 큰 외부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개혁·개방을 외면하면 할수록 이러한 “동·서 양진영간의 화해와 협력”의 큰 물결은 그들 사

회에 밀려들 것이며, 이는 시대적 물결인 동시에 요청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大勢를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2. 蘇聯共產黨의 沒落과 社會主義國家의 改革

미·소양극체제의 붕괴로 인한 여파는 세계전역에 미치고 있다. 이곳에서는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원국가의 개혁·개방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그것이 북한에는 어떠한 외부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소련은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경쟁 및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과 불합리성으로 인해 개혁·개방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즉 고르바초프대통령에 의해 본격화된 소련의 대서방 및 동맹국정책은 “계급가치 보다는 인류전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포괄적인 신사고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동유럽국가의 민주화운동이 촉발되었으며, 동서독이 통일되었고, 사회주의를 국가최고의 통치이념으로 채택해 오던 국가들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要因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즉 고르바초프가 주도해 오던 개혁·개방정책은 소련사회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私有대신 所有를, 계획경제 대신 시장경제를 선호하게 하였고, 국민개개인에게 보다 많은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과정속에서 지난 91년 8월 소련내 일부 강경보수파들에 의해 자행된 쿠데타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입지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몰락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쿠데타의 실패로 인해 소련사회에는 보다 큰 개혁·개방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연방체제

까지도 완전히 와해되어 그 권한이 소련내 최대 구성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에
로 승계되는 역사적 대사변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는 “소련”의 국호와 실체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대신 “독립국가연합체”라는 새로운 형
태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고르바초프 대신 “엘친”이라는 새로운 인
물이 소련의 역사를 새롭게 가꾸어나가는 중책을 맡게 되었고, 이제 소련은
12개 구성공화국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연방공동체”로서 그것도 러시아공화
국이 소련을 대체하는 국가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다음은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中國共產黨은 執權以後 共產主義 理
念에 立脚한 政治體制의 確立에만 몰두하여 가장 경직된 閉鎖的 社會構造를 形
成하였다. 그 결과 經濟的인 後進성과 國民生活水準의 低下를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毛澤東의 死亡에 따라 1978年 鄧小平이 등장한 以後 經濟的 落後性을
解消하기 위한 一環으로 經濟改革과 對外開放政策을 과감히 推進하였다. 따라
서 中國은 外國의 資本과 技術의 導入을 서둘면서 國內的으로는 經營改善, 科
學技術과 產業의 現代化, 한정된 範圍의 個人企業 인정, 經濟特區의 설정 등 經
濟改革政策을 施行하였다.⁷³⁾

그러나 中國은 1989年에 있었던 천안문 流血事態 以後 保守路線으로 回歸하
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징후로 中國當局은 그 事件이 있는 직후부터
이른바 4大原則을 繼續해서 강조하고 있다. 4大原則이란 社會主義의 堅持, 共產
黨의 指導, 人民民主主義 獨裁,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澤東思想의 持續的인
追求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中國은 이러한 4大原則에 立脚하여 中國이

73) 山內一男, 「현대 중국 경제개혁」(동경: 學陽書房, 1988), p. 53.

당면하고 있는 政治·經濟·社會의 모든 問題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闡明하면서 理念教育을 強化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中國은 韓半島問題에 있어서는 既存의 戰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韓半島에 대한 中國의 基本戰略은 現狀維持戰略인 바, 그것은 i)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一方的인 影響力을 상쇄하기 위해 美國의 影響力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ii) 韓半島에서 美·中關係를 破局으로 몰아넣는 軍事的 衝突을 牽制해야 하며, iii) 戰爭으로 北韓이 蘇聯쪽으로 偏向되는 것을 防止해야 한다는 必要性에 根據한 것이다.⁷⁴⁾

특히 지난 91년 11월의 8中全會를 통해 이러한 中國의 政策이 훨씬 더 前向的인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中國의 實用主義 路線은 經濟的 必要性을 強化시키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現在 中國은 그들의 體制固守 論理에 의거하여 北韓과 同盟關係를 表面的으로는 維持하고 있지만 최근 韓·中間의 貿易庫가 30億弗을 상회하며, 中國의 10대 貿易國으로 浮上한 韓國과 的交流를 더욱 必要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1~2年內의 修交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다.

다음은 동구권 및 여타지역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차세계대전이 終熄되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마르크시즘’에 立脚하여 형성된 東歐블럭은 그동안 줄곧 자본주의와 팽팽한 체제경쟁을 해오던 차세에 美·蘇 和解와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이 동구권에 대한 불간섭정책을 천명하고, 이로 인해 1989년 東歐圈이 崩壞됨으로써 國際秩序가 재편되었다. 그동안 東歐圈 국가들은 개혁을 여러번 시도했으나 좌절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74) Young C. Ki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1975, *Asian Survey*, Vol. XVI, No. 1(Jan. 1976), pp. 82~94.

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소련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추구된 ‘동구에 대한 不干涉政策’이 결정적인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정치적 개혁과 經濟的 개혁을 근간으로 한 소련의 개혁정책은 외교적으로도 서방에 대해 非友好的이었던 정책의 조정을 통한 군사적 의미를 포함한 平和共存의 摸索으로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계급의 이익에 선행하여 인류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인데, 이는 동구로 하여금 체제적 이데올로기 對立에서 脫皮하여 상이한 체제여부와 관계없이 平和的 협력 내지 경쟁을 圖謀하도록 하는 發想轉換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다른 한편 當事國들의 變化要因은 무엇보다도 일당독재체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체제의 정체성에 수반되는 개혁의지에 기인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들 체제의 특성상 국가의 결정기구인 정당이 되며 그것은 국가보다 상위에 군림하면서 사실상 모든 권력을 독점으로 장악하여 통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權力構造는 必然的으로 과잉 官僚主義를 낳게 되었으며, 그것이 정치체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체제의 운영방식이 경제체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 運用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運用結果, 初期에는 상당한 정도의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듯 했으나 직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주의 經濟體制는 결국 탄력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자본주의 經濟體制와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落後의 길을 걷게 되었다.⁷⁵⁾

최근의 경제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이들 동유럽국가들은 앞다투어 서방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경제접촉·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있

75) 민병천 편, 전환기의 남·북한관계, 1991, pp.106-109.

다. 또한 이들 동유럽국가들은 정치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국내정치면에서는 이미 지난 90년 공산당권력 독점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총선을 통해 그들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競選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私有제도의 인정, 私企業의 운영 허용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대폭 도입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서방국가들과의 매우 빈번한 접촉·교류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한동안 “東유럽의 孤島”라고 지칭되던 알바니아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아무튼 이들은 보다 나은 생활여건의 창출과 경제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 수십년 동안의 소련통치 및 사회주의체제의 틀 속에서 벗어나 매우 빠른 속도로 개혁·개방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와의 수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헝가리와의 수교(89.2)를 효시로, 이들 동유럽국가는 우리와 공식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세계전역에 散在하고 있는 기타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75년 공산화통일을 달성한 베트남은 80년대말 동유럽을 강타한 개혁·개방의 물결이 거둔 성과를 유심히 관망하면서 낙후된 그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자본주의적 시장요소의 도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즉 베트남 共産黨은 硬直된 共産主義 理念보다는 民族主義를 보다 중시하는 한편 先經濟改革, 後政治改革이라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해소함으로써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⁷⁶⁾

특히 베트남은 蘇聯共産黨의 붕괴로 인한 直接的인 影響圈에서 벗어나 베트남 국민들의 確實한 改革政策과 民主化를 수렴하여 보다 과감히 개혁·개방정책

76) 曹在鉉, “공산주의 붕괴 도미노: 베트남의 고민”, 국제문제, 1990. 6, pp. 38-40.

을 추진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속되는 共產統治로 經濟的 落後性과 政治的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는 라오스(미얀마)는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정책과 關聯해 國民들의 불만이 高潮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강력한 開放政策과 改革政策을 요구할 전망이다. 1975年 12月 人民革命黨 政權이 樹立된 라오스는 과거 中國의 影響을 많이 받아온 關係로 앞으로도 별다른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그에 따른 對應方案을 摸索할 것으로 展望된다.

쿠바는 지난 30餘年 동안 共產主義와 레닌을 찬양하면서 “러시아 革命이 없었다면 쿠바革命도 不可能했을 것”이라고 力說하는 가운데 共產主義體制를 신봉하여 왔다. 그러나 레닌의 동상이 각국에서 撤去되는 現 時點에서는 쿠바 共產黨과 카스트로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80年代末 以後 급속도로 擴散되고 있는 쿠바國民들의 民主意識과 西歐化 바람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 政權은 他 共產國家들과의 결속을 다지면서 당분간 現 체제를 그대로 고수할 것으로 展望된다. 특히 蘇聯事態 以後 蘇聯外務長官의 쿠바지원 中斷과 兩國關係 재고 檢討發言은 큰 衝擊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차대전을 전후해서 蘇聯의 直·間接的인 支援을 받아 결성된 西歐 共產黨 역시 現 재로서는 집권전망이 거의 없고 대부분 影響力을 상실하여 軍소정당으로 전락해 있는 처지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기가 더욱 떨어진 西歐 共產黨들은 당명을 變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공산당의 몰락과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은 북한에게 있어 개혁·개방을 위한 매우 큰 외부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최대 경제·군사지원국이었던 소련에서 연방체제가 붕괴함으로써 더이상 소련으로부터의 원조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북한으

로서는 큰 충격과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⁷⁷⁾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북한은 지난 91년 10월 김일성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는 등 對中關係 密着을 기하고 있으나, 중국 역시 내부적으로 극심한 경제침체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대한 만큼의 원조를 해줄 수 있을가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매우 높다. 따라서 북한은 이중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여기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우리와의 직·간접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북한으로서는 더욱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3. 東·西獨의 統一

20세기 최대의 정치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통일은 독일이 한반도와 같이 2차대전의 냉전의 산물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은 다른 어느 사건보다 각별하다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의 통일은 1972년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추진하기 시작한 이른바 「東方政策」을 시발로 하여 꾸준히 시도되어 온 서독인들의 통일노력의 結果였다고 할 수 있다.⁷⁸⁾

1972년 東方政策이 발표될 당시 동독은 그들의 「一民族 二國家」론을 고수한다는 방침하에 통일에 積極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동독의 민족론 내지 국가론은 그것을 단지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일방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이질적인 두 민족의 統一이 論理的 矛盾이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통일보다는 이질적인 체제로써 동독민족의 優秀性を 확보하는데 진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독의 노력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 가운데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77) 白尙健, “동·서이데올로기는 없어지는가”, 민족지성, 1990. 11, pp. 56-60.

78) 김학준, “독일상황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국제정세, 국제학술원, 1989. 12, pp. 27-31.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模範的인 社會主義國家로서 浮上함으로써 그들의 논리를 입증시켜 주는 듯 했다.

그러나 東·西獨의 人的·物的 교류가 증대되면서 西獨에 대한 동독인들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교류가 확산됨에 따라 점차 민족적 同質性이 回復되게 되었다. 이는 必然的으로 兩 體制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점차 심화되는 동독의 經濟的 後進性과 그들이 자부해왔던 분배정의 측면에서도 서독에 대하여 絶對弱勢를 면치 못하게 되자 大衆의 반발이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국제적 환경속에서 베를린 장벽을 崩壞시키는 폭발력을 갖게 하였다.⁷⁹⁾

이러한 獨逸의 統一은 우리에게 커다란 자극임과 동시에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사건으로써 독일의 통일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統一論議의 增大는 그것을 잘 反映하고 있다. 더욱이 2차대전의 敗戰國으로서 외부적 요인이 분단에 더욱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통일이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던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큰 것이다. 사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동·서독의 통일은 그들이 분단 이래 지속적으로 가져 왔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남북한과 같이 동독상잔의 비극을 겪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래 경제·체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접촉과 교류를 매우 빈번히 가져왔기 때문에 민족간 적대감이나 증오심이 거의 없는, 냉전체제의 분단상태만을 지속해 왔던 것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155마일에 이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매우 극심한 상호비

79) 徐丙喆, “동구변화와 한국의 외교문제”, 치안문제, 1990. 3, pp. 41-45.

방과 대치상태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양국의 정도가 매우 강한 그런 관계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통일은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한 하나의 외부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동·서독의 통일이전에 동독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그들 국민들에게 동독의 뛰어난 경제수준과 국민수준을 선전·보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북한이 그토록 자찬하던 동독은 같은 민족인 서독에 의해 「흡수통합」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기 때문에 동·서독의 통일은 바라보는 북한의 심정은 매우 착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동·서독의 통일에 대해 별다른 논평없이 사실보도만을 주민에게 알리면서, 남과 북사이의 「먹고 먹히는 식」의 통일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⁸⁰⁾

이는 바로 그들이 동·서독식의 통일방식을 매우 두려워하는 하나의 시사로 볼 수가 있다. 즉 북한은 동·서독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동독주민의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염원된 것임을 배제한 채 서독에 의해 강제 통합된 것인양 호도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다. 아뭏든 동·서독의 통일은 폐쇄와 고립노선을 변함없이 고수해가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충격임과 동시에 체제개혁을 위한 자극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80) 이영기, “서독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씨알의 소리, 1989. 3, pp. 18-20.

第3節 南北韓關係變化에 따른 壓力要因

1. 韓國의 北方政策 推進

現在 韓國이 推進하고 있는 北方政策(Nord-politik)이란 과거 西獨의 브란트 首相에 의해 推進된 蘇聯과 東獨에 대한 政策인 東方政策(Ostpolitik)에 견주어 使用되는 用語로서, 理念과 體制가 상이하면서도 韓半島를 둘러싼 安保環境에 直·間接의 影響을 줄 수 있는 蘇聯, 中國 및 기타 東歐圈 등과 같이 主要 共產 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을 積極的으로 圖謀하고, 아울러 北韓과도 새로운 關係를 定立하고자 하는 우리의 外交的 努力을 總體的으로 意味하는 말이다.

韓國 北方政策의 始發點은 1973年 6月 23日 發表된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관한 特別宣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宣言에서는 우리가 分斷以後 持續的으로 견지해 온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하면서 南·北韓 동시 UN加入을 인정한다는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그러나 북방정책이 가시화·구체화되어 본격적인 結果를 산출하게 된 것은 6공화국에 들어와서 1988年에 발표된 7·7宣言이 發表된 이후 라고 할 수 있다.⁸¹⁾

즉 北方政策은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냉전논리에 입각한 親美·反共外 交의 틀에서 탈피하여 적대적인 關係에 있던 國家들과의 共存·協調를 모색하는 동시에 北韓을 이단적 敵對集團이 아닌 同伴者로 規定하고자 하는 劃期的인 認識의 大轉換으로서 韓國 外交史에 있어서 중요한 轉換點이 될 것이다.

특히 7·7宣言은 自主·平和·民主·福祉의 4原則을 基礎로 하여 6個項目의 政策

81) 金明基, “북방정책과 통일정책”, 사회과학논총,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12, pp. 122-132.

宣言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그것은 中·蘇에 대한 우리의 關係改善意志와 北韓과 美·日간의 關係改善에 대한 協調意思를 밝힘으로써 美·日·中·蘇의 4강과 南·北韓間的 相互關係에 있어서도 종래의 同時相互性的의 論理를 포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와같은 적극적인 北方政策을 推進할 수 있게 된 배경은 그동안의 經濟發展에 힘입어 北韓에 대해 보다 여유있는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中國·蘇聯에 대한 被害意識과 적개심을 緩和시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蘇聯·東歐의 變化를 필두로 한 國際情勢의 신데탕트화에 편승함으로써 共產圈에 대하여 보다 前向的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背景하에 推進된 北方政策은 i) 종래의 偏重外交에서 벗어나 全世界國家와 高루 外交關係를 수립함으로써 명실공히 自主·獨立國家로서의 위상을 定立하고, ii) 蘇聯, 中國 등을 비롯한 北韓의 友邦과 關係를 개선함에 의해 北韓의 開放과 變化를 유도하여 窮極的으로 平和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여건을 造成하며, iii) 앞으로 到來하게 될 아시아·태평양時代에 대비하여 協力の 對상을 全世界的으로 擴大시키고, iv) 他國의 도움에만 依存하던 과거와 달리 어느정도의 위치에 올라선 현재의 韓國이 이제는 東·西 和解와 人類平和에 寄與할 때가 왔다고 보아 世界繁榮에 동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 政府는 7·7宣言 이후에도 盧大統領이 1988年 10월에 행한 UN總會의 演說에서 i) 南北韓間 불가침 내지 무력불사용의 共同宣言과 ii) 軍비축소 방안 등과 같은 南北韓間的 懸案을 論議하기 위한 南北頂上會談의 開催 및 iii) 東北아시아 平和를 위한 6개국 協의체 구성을 제의하기도 했다.

具體的으로 北方政策의 對象을 살펴보면 크게 i) 蘇聯·中國·東歐圈을 包含

한 共產國家들과 ii) 北韓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²⁾

北方政策을 推進하는 理由는 무엇보다도 統一의 先제조건인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하여 中·蘇의 도움을 이끌어냄으로써 北韓의 挑發을 억제하고 協商의 테이블에 마주앉을 수 있게 한 것인데, 이점에서 우리는 蘇聯·東歐諸國과 이미 國交를 樹立하였으며, 中國과도 貿易事務所의 開設이후 交易과 經濟協力を 계속해서 增大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外交的 努力은 蘇聯·中國으로 하여금 北韓의 自制를 요구하게 함으로써 現在까지 어느정도 實效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對外的인 노력외에도 南·北韓 相互間의 對內的인 努力이 並行되어야 함으로 對北韓政策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北韓政權을 일단 인정하고 北韓人民을 敵對的 對象이 아닌 同伴者的 對象으로 認識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對話와 交流를 增進시킴으로써 北韓의 開放과 變化를 誘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政策을 推進함에 있어서는 政治의 民主化, 公정한 富의 分配, 階層間의 葛藤解消 등을 包含하는 南韓내의 政治, 經濟, 社會安定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의 韓國의 北方政策은 적어도 그 期間에 비한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進전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래에 견지해오던 友邦이나 敵에 대한 觀念과 이데올로기의 混亂을 招來하게 되었고, 치밀하게 계산된 中·蘇의 對韓 접근에 대한 우리측의 感傷的·衝動的 對應과 과잉기대에 대한 비판이 없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北方政策의 推進에 있어서 副作用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다 바람직한 改善方

82) 강석승, “한국의 북방정책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 (90년 가을호, 현대사회연구소), pp. 247~251.

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⁸³⁾

첫째, 北韓에 대한 보다 前向的이고 伸縮性있는 對應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즉 종래의 北韓에 대한 적개심과 恐怖意識을 지양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라는 동포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中·蘇와의 關係改善에 있어서 보다 巨視的이고, 치밀한 狀況 및 情勢分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中·蘇와의 關係改善을 圖謀하되 感情에 치우쳐서는 안되며, 美國 등을 비롯한 기존 友邦國들과의 關係에 손상을 미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고, 특히 北韓으로 하여금 심한 고립감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北方政策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美·日·中·蘇의 개별입장과 北韓도 고려하는 綜合的이고도 냉정한 견지에서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國家利益間的 조화를 꾀할 것이 요망된다.

2. 北韓의 對外政策 基調의 變化

韓國의 7·7宣言이 發表되었을 때 北韓은 이에 대해 韓半島 分斷을 영구히 固着化시키려는 分裂主義 策動이라고 일축하고, 韓國의 統一政策에 대하여 反民族的 隸屬政權에 의한 反統一政策으로 간주하면서 모멸적인 언사와 根本적인 무시의 태도를 보였다. 이와같은 北韓의 태도는 聯邦制統一方案을 비롯한 그들의 主張에서 一貫性있게 견지해온 이른바, 「하나의 조선」政策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北韓은 解放 以後 줄곧 閉鎖體制를 유지해 오면서 北韓을

83) Loc. cit.

韓半島에서 유일하게 正統性을 지닌 政府로 생각하고 南韓은 미제의 植民地로서 장차 解放시켜야 할 영토의 일부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韓國政府를 認定하지 않았다.⁸⁴⁾

따라서 北韓측으로서는 한국을 承認한 國家의 政府와 關係를 正常化할 경우 그것은 곧 한국을 인정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南北韓 동시 수교국들이 있기는 했지만, 韓國의 긴밀한 友邦인 美國·日本과의 關係正常化만은 거부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韓國의 北方政策에 대응하는 의미로서의 北韓의 南方政策이란 存在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韓國은 최근 積極的인 北方政策과 經濟性의 論理에 입각한 國際關係의 화해무드에 편승하여 지금까지 北韓體制를 지탱해주던 양축이라고 할 수 있는 中·蘇와의 關係改善을 도모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北韓은 과거 冷戰時代에 國際外交舞臺에서 향유했던 國際的 지위와 그들의 閉鎖體制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70年代 중반 이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北韓의 經濟難은 國際的 孤立과 惡循環의 연계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北韓은 既存의 자신들의 입장과 論理的인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美國·日本을 비롯한 西歐國家들과 第3世界國家들과도 관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의 北方政策에 對應한 南方政策을 積極的으로 펼치고 있다.⁸⁵⁾

北韓이 최근에 우리의 北方政策에 대응한 南方政策을 推進하는 등 대외정책 기조를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國際情勢속에서의 나름대로의 戰略的인 계산이 있다. 즉 東歐圈의 自由化와 韓·蘇關係의 급진

84) 李洪九 外, “북방정책과 통일전망”, 국책연구, 민주자유당, 1990. 9, pp. 38-41.

85) 許漫, “북방정책과 평화통일”, 외교, 한국외교협회, 1989. 12, pp. 44-48.

전은 北韓으로 하여금 美國·日本에 대한 關係改善을 도모케 하는 外壓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長期的인 駐韓美軍 撤收計劃의 발표는 北韓에게 대미접근의 명분으로 제시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은 駐韓美軍의 撤收를 가장 큰 要求사항으로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駐韓美軍의 存在가 한국의 성공을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라고 생각하므로 그들이 撤收하게 되면 한국政府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은 相對的으로 北韓이 한국政府와의 協商過程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北韓이 한사코 韓半島問題의 協商에 美國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美國의 개입을 통해 韓國의 位相과 獨自性を 훼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協商過程에서 美國과 韓國과의 分裂을 조장함으로써 그 틈을 이용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은 미국과의 18차례에 걸친 북경에서의 접촉을 통해 양국접촉 수준을 현재의 참서관급에서 대사급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과 대외 이미지의 실추를 만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北韓이 韓國에 대한 美國의 影響力을 과대평가하여 南北韓間의 協商內容에 대한 美國側의 보증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北韓으로서는 美國에 접근함으로써 韓半島問題解決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美國이 움직이도록 하려고 努力할 것이고 그 過程에서의 韓國의 입지약화를 기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判斷된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北韓의 對美接近을 蘇聯·中國을 이용하거나 調整하기 위한 빌미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즉 北韓은 美國과의 關係를 改善함으로써 外部의 經濟援助獲得機會를 增加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서 北韓의 對美接近에 대한 中·蘇의 경계심을 이용한 援助獲得으로 經濟難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⁸⁶⁾

美·北韓 關係에 비해 日·北韓關係는 빠른 속도로 진전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넓게는 亞·太地域에서, 좁게는 韓半島에서의 影響力 擴大를 피하고자 하는 日本과 日本으로부터의 賠償金を 비롯한 經濟援助를 통해 經濟難 탈피를 피하고자 하는 北韓의 利害關係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북경에서의 양국국교정상화를 위한 3차례 예비회담을 개최한 이후 평양과 東京을 오가면서, 이의 실제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5차례의 본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日·北韓 接近이 자신들의 立場과 矛盾되는 것이 아니라는 根據를 내세우고 있다. 즉 日本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백기를 들고 降服해와서 용서를 빌고 있는데 어떻게 關係改善을 안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이다.

게다가 최근의 韓·蘇 接近은 日本으로 하여금 北韓에 接近할 수 있는 名分을 提供하였으며, 北韓으로서도 日本과의 關係改善으로 얻어지는 經濟的 利益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日·北韓關係는 核安全協定署名등의 현안문제가 해결된다면 멀지않아 양국관계 進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⁸⁷⁾

이렇게 볼 때 北韓은 앞으로도 短期的으로 國際的인 고립을 면하고 당면한 經濟難을 解消하기 위해서, 長期的으로는 韓半島에 대한 美國·日本등의 立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變化시키기 위해서라도 南方政策을 적극 推進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한국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한국내의 反政府勢力을 北韓支持 勢力으로 轉換시키고, 海外僑胞社會가 北韓을 지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基

86) 강석승, “북방정책, 통일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민족지성, 1991. 1, pp. 105-112.

87) 박봉식, “어쩔 수 없는 UN가입과 대일본 수교”, 북한, 1991. 12, pp. 28-29.

本的으로 한국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미·일 등과의 관계 개선이 진전될 경우에 파급될 개방화의 압력을 얼마나 제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최근에 접어들면서 그들이 이제껏 관철해 왔던 사회주의국가 및 비동맹국가 편향적인 대외정책기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동·서협력시대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곧 남북한관계 변화에 따른 또하나의 압력요인으로서 우리 정부가 그들이 지금까지 동맹관계를 맺어왔던 사회주의 국가와 공식관계를 수립한 데서 오는 하나의 반작용적인 것인 동시에 自救策이라 할 수 있겠다.

3. 南北韓 유엔同時加入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

分斷以後 줄곧 「하나의 조선」을 내세우며 南北韓 유엔同時加入을 反對해왔던 北韓이 5월에 立場을 바꿔 유엔加入을 결정함으로써 1991年 9月 18日 개막된 第46次 유엔總會는 南北韓의 유엔 加入決議를 채택했다. 이와 같은 北韓의 입장표명에 이은 UN가입은 世界的인 脫理念 推移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 노선의 불가피성으로 인한 개방사회로의 전환기 현상임을 반영한 것이다.

鄧小平의 實用主義 路線과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政策이 등장하면서 자유의 싹이 발아될 興件이 造成되자 獨逸의 統一이라는 革命의 꽃을 피워 유럽의 냉전사를 종식시켰다. 따라서 작금의 世界秩序는 2차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해 왔던 基本的 屬性인 理念對立이 큰 폭으로 變化되고 新國際秩序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유럽을 휩쓸어 東歐圈의 불록을 붕괴시키는 歷史的 事件을 계기로 韓半島의 政治的 역학관계에도 지대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위와 같은 國際情勢의 變化와 더불어 6共和國 政府는 통일문제 내지 북방정책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강조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의 政策對象으로 삼았던 역대정권들과는 달리 적극적인 北方政策을 追求한 결과, 과거 北韓의 중요한 外交的 決定의 에이전트였던 蘇聯과 國交正常化를 이룩하고 아시아 共產主義 宗主國인 中國과 준수교적 의미가 있는 相互貿易代表部를 編入시키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形成되고 있는 國內外的 環境의 變化는 北方政策에 대한 關心의 增加를 낳으면서 南北韓 同時加入의 기폭제가 되었다.⁸⁸⁾

南北韓 유엔同時加入은 40餘年間の 가장 큰 외교장벽을 무너뜨리는 쾌거였다. 그동안 南北韓 양측은 分斷以後 유엔가입을 둘러싸고 가입시도와 저지를 되풀이하는 각축전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우리는 15차례의 가입시도를 했고 北韓은 6번의 시도를 하면서 팽팽한 대치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70年代 前半까지 낭비적인 대결양상을 띠었으나, 70年代 後半부터 80年代까지는 具體的인 加入推進은 없이 外交的인 각축과 內部的인 알력으로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第6共和國의 北方外交로 北韓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고 계속되는 全世界的인 개방과 화해무드를 거역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외곽외교에 몰린 北韓이 유엔에 加入하겠다고 宣言한 것은 그동안 명분과 理念에 충실했던 북한 外交政策이 실리추구 政策으로 전환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것은 對南戰略에 대한 基本的이고 全般的인 「모델轉換」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韓半島의 安全構造 構築을 위해 前向的인 사태임엔 틀림 없다.

88) 전정환, “냉전질서에서 평화질서로”,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1991. 12, pp. 41-45.

北韓의 유엔加入 결정은 南韓의 南北韓 동시 또는 개별 유엔加入 提案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과 공격의 非論理性, 非現實性, 이율배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더이상 宣傳·煽動攻勢를 펼 수 없는 벼랑에 다다랐기 때문이며 國際社會에서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른 韓國의 위상이 격상되고, 北韓이 最後의 보루로 믿고 있던 中國이 유엔單一議席 加入을 반대하고 蘇聯이 韓國유엔政策을 지지하는 등 國際社會의 壓力이 多角的으로 작용함으로써 마지막 선택은 유엔에 가입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⁸⁹⁾

北韓의 이번 措置는 對外開放의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으며 이의 가시적인 성과는 南北韓 平和共存 토대확립과 상시대화 채널의 확보이며,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곳은 統一 및 대남정책이다.

北韓이 유엔에 加入함으로써 그들 政府樹立 後 지금까지 계속 고집해온 「하나의 조선」 논리를 사실상 철회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이제는 南韓의 實體를 認定해야 되며 從來의 赤化統一 戰略이나 統一前線戰術의 대남정책의 根本的인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高麗聯邦制 統一案의 경우 현실에 맞춘 方法論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며 수정 내용은 南北 地域政府의 外交, 軍事, 立法權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측의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과 상당히 近接할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작금의 韓半島 統一問題는 그 어느 때보다도 韓國이 獨立變數로 作用할 可能性이 높아졌으며 周邊 強大國들에게 韓半島 統一의 當爲性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엔의 정회원이 된다는 것은 國際平和機構에 加入함으로써 그 자신은 폭력을 포기하고 平和를 수호하겠다는 國際的인 公約이 되며, 서로의 실체를 事實

89) 김집, “북한은 아직 대화할 자세 아니다”, 월간 자유공론, 한국자유총연맹, 1991. 12, pp. 63-69.

上 인정하게 되어 平和統一의 기반이 마련된다.

北韓은 和解와 協力을 強調하면서도 여전히 이른바 「南朝鮮解放」의 論理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유엔加入을 決定하게 된 배경 說明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듯이 그들의 결정은 韓國이 유엔에 단독으로 加入하려는 「分裂主義的 策動」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措置였다고 주장했다. 즉 그들은 不滿에 찬 심정으로 유엔가입의 길을 택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언급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당분간은 北韓이 韓國과 대결 자세를 취할 可能性이 높다.⁹⁰⁾

그러나 지난 91년 12월 남북고위급 제 5 차회담에서 채택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내용에서 보면, 북한의 對南戰略은 다소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즉 북한은 내심으로는 「남조선해방」의 논리를 관철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비핵지대화, 평화협정체결 등을 예외없이 주장하면서, 표리부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이러한 이중자세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아무튼 남북한 UN가입과 합의서 채택으로 인해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한 외부조건은 점점 성숙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개혁·개방을 위해 체제변화를 시도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간주되고 있다. 문제는 그 시기만이 남았으며, 그 결정적 분기점이 바로 「김일성 사망」으로 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90) 김성운,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실상과 우리의 대응”, 월간국방, 국방부, 1992. 1, pp. 82-89.

第 4 章 金日成 死後의 北韓體制 變化展望

第1節 體制變化 動因과 改革類型

1. 體制變化의 動因

국제정치의 신질서 구도에 이미 編入된 양상을 노정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엄청난 변화는 北韓이 냉전시대에 향유했던 國際的 위상은 물론 그들의 폐쇄체제를 더이상 維持하기 어려운 狀況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國際的 고립의 탈피와 체제의 存立을 위한 모종의 對策을 강구해야 할 입장에 직면하게 되었다.⁹¹⁾

특히 現在 北韓은 식량난이 일만큼 경제침체가 심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國際的 孤立과 더불어 경제위기까지 겹쳐 어떤 형태로든 開放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北韓의 開放은 그들의 지상과제인 體制維持라는 명제와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開放을 할 경우에는 開放바람 유입이 곧 바로 체제붕괴로 이어진 이른바 동구의 도미노식 變化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체제 위협으로 開放의 한계성을 안고 있다. 사실 北韓은 主體思想이라는 단일의 政治的 상징체계에 근거한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경직성이 높은 北韓體制는 開放충격을 흡수할 만한 신축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開放시 急激한 붕괴의 위험이 높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韓國의 北方政策에 對應하여 그들의 基本立場과

91) 吳林默, “북한의 김정일체제의 등장과 그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동국대 행정대학원, 1990).

다른 政策的 전환으로써 日本과 關係正常化를 서두르고 있으며 美國 및 서구 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제3제국에까지 손을 뻗쳐 관계개선을 다각적으로 도모하고 있는데, 이른바 남방정책의 一還으로 追求되는 最初의 北韓의 움직임은 단지 國際的 孤立을 벗어나는 구태의연한 既存의 자세와는 다른 각도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이 된다.⁹²⁾

또한 1990년 이후 南北關係에서 그들이 보였던 자세를 볼 때에도 既存의 대결구도에서 보인 태도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으로 진일보한 교류적 국면으로 轉換하는 느낌이다. 특히 南北總會談이나 南北單一팀을 구성한 탁구를 비롯한 스포츠會談들, 금년 5월부터 實施되는 南北韓 첫 직교역, 그리고 각종 사회 및 民間團體의 交流增大는 남북한의 관계진전의 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北韓은 體制維持와 開放이라는 상이한 두 개의 이율배반적인 목표를 동시에 追求하는 폐쇄적 開放化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北韓의 變化의 動因은 무엇인가? 이러한 北韓의 變化에는 크게 對內外的 요인 두 가지가 작용되고 있다. 첫째 對外的 요인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소련의 신사고 외교정책이 追求된 결과 유럽에서 냉전구도가 청산됨으로써 세계질서는 재편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러한 國際關係의 신질서에 부흥한 韓國의 北方政策으로 한국이 대공산권의 거의 모든 국가들과 수교를 맺게되자 北韓은 國際關係에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한·소수교 이후 蘇聯의 對한반도 政策이 형평성을 찾아가면서 점차

92) 金甲喆, “북한의 체제변화와 그 전망”, 월간「북한」(북한연구소), 1990. 12), p. 45.

蘇聯과 북한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변하고 있는데, 최근 蘇聯은 北韓의 主體思想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던 既存의 입장을 수정하여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

둘째는 內部的으로 심화되는 경기침체가 커다란 開放壓力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0년대의 北韓經濟의 最大의 난제는 主體經濟가 가지는 體質的 특성에 기인된 急激한 성장의 둔화현상이다. 이러한 北韓의 경제침체의 요인은 한마디로 생산성의 저하로 집약되는데, 그것은 自立經濟를 追求하는 북한경제의 특성때문에 산업화가 부진하고 기술이 落後됨에 기인된다.

북한의 경제가 침체된 원인은 i) 現存 社會主義의 기본적 특징인 중앙집권적 計劃經濟體制의 비효율성, 관료주의, 노동인센티브 부족, 그리고 經濟運營의 경직성 등 체제의 특성, ii) 自立經濟노선이 가져온 한계, iii) 政治·군사 우선주의 經濟政策 및 이에 따른 資源分配의 부적정 등을 들 수 있다.⁹³⁾

이러한 北韓經濟의 모순과 더불어 무리한 군사비 支出은 經濟危機를 가중시켰다. 게다가 蘇聯과 中國의 原油供給 減少措置는 深刻한 에너지 위기까지 낳게 하여 북한의 경제는 좌초직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北韓이 폐쇄체제를 維持할 수 있었던 要因은 정권수립 직후부터 정·경 분리의 原則을 固守하며 主體經濟속에서 理念을 經濟的 가치보다 상위개념으로 상징조작화하는데 成功해왔으며 철저한 병영사회의 維持로 주민의 욕구통제를 施行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情報의 통제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체제의 경직화는 심화될 것이며, 외부변화에 대한 體制의 適應能力이 減少된다는 側面에서 볼 때 북한의 開放충격은 의외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93) 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91. pp. 13~20.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반도의 주변정세의 變化는 한반도의 秩序재편과 北韓의 開放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社會의 개방은 지금까지 固守해온 정치·경제구도와 충돌을 불가피하게 하며, 차단되었던 情報의 유통을 막지 못하게 되는 結果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經濟體制의 改革과 대남정책의 變化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改革은 그들의 체제적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背峙된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北韓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開放壓力은 어떤 형태로든 開放을 불가피한 선택대안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최초의 南方政策의 추구에서 시사해 주는 것처럼 體制的 부담을 대내적 體制維持 능력과 調整을 도모하면서 體制나 정권의 수준에서 보다는 구체적인 대외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 社會主義國家의 改革類型

대내외적 요인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북한체제는 개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일성의 死後에는 개혁의 형태나 정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그 후계체제가 어떤 방식의 改革을 추구하게 될 것인가를 음미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Marx-Lenin주의를 국가통치이념의 기초로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비록 김일성이 이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주체사상을 정립하고 있어도, 사회주의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전반의 특성과 무관하게 개혁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⁹⁴⁾

94) 金昇榮, “북한체제의 유지능력에 관한연구”, 「북한통일 연구논문집(Ⅲ)」 (통일원, 1991), pp. 190~192.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金正日 후계체제의 改革類型을 예측해 보기 위해 지금까지의 共產主義 국가의 改革유형을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레닌(Lenin)의 신경제정책

1917년의 蘇聯에서의 볼셰비키혁명 후 蘇聯憲法은 i) 全 生産 手段의 공유화, ii) 중앙집권적 計劃經濟, iii) 사적 이윤의 배제, iv) 노동 의무화, 착취자 억압, 사회주의 건설 등을 規定한 후 關係法律을 제정하여, 전시공산주의 체제가 수립되었으나 이같은 조치는 곧 관료주의화, 기업관리의 형식화, 노동계층의 무기력화 및 생필품 부족 등의 현상을 유발시키게 되었다. 생산량을 急激히 감소하였고 도처에서 파업과 폭동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21년 10차 공산당 대회는 신경제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農業의 국가통제와 농작물 국유제도 폐지, 농공업의 사적 경영인정, 생산물의 자유처분 및 시장경제부활 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레닌의 신경제정책 유형은 어디 지나 외교정책상의 평화공존론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전술적 변화였고 공산주의 이념으로 一黨 獨裁體制를 固守하였다. 게다가 이 같은 改革도 레닌의 피격사망으로 좌절되고 스탈린의 집권후에는 국유화, 집단화와 대대적인 숙청으로 이어지는 비인간적 일당 독재체제의 수립으로 중단되었다.

2) 티토(Tito)의 개혁유형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대내적으로 중앙집권적·計劃經濟體制의 산물인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당·공장, 회사의 자주관리와 집단농장해체 등의 改革을 단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蘇聯의 지배에서 벗어나

기 위한 비동맹 中立國家를 표방하므로써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196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하향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의 관료들의 형식주의·요령주의와 함께 사업장 單位별 구성 조직이 組職管理를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타성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3) 흐루시초프의 이윤제도

흐루시초프는 1960년대 초에 하르코브 技術經濟大學教授인 리베르만(Liberman)교수의 프라우다紙 기고논문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골격 중 基本計劃만 中央政府가 담당하고 부분적·세부적 문제들은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담당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이러한 企業活動을 자극하기 위한 상여금 제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蘇聯의 관료주의의 장벽에 부딪쳐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웠고, 이후 흐루시초프는 보수관료파인 브레즈네프에 의해 실각당하고 만다. 이때에도 흐루시초프는 레닌과 티토 등과 같이 대외적으로는 평화공존론을 지향하였다.

4) 鄧小平式 改革類型(정·경분리식 改革類型)

중국의 덩소평은 모택동 사망후 권력을 장악한 후 엄격한 정·경분리를 전제로 정치적으로는 '당의 지도', '社會主義', '계급독재' 등의 原則을 固守하면서도 經濟的으로는 사회주의의 완전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집단농장제를 폐지하고 경제 특구 설치, 부자될 권리인정, 외국자본 및 시장원리의 도입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追求함으로써 中國經濟를 急速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이같은 改革도 천안문사태를 기점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나 철저한 정·경분리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5) 체코의 자유선언과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類型

1968년 체코의 각계인사들이 주동이 되어 발표된 “2000어 선언”에서는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낳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人間的 얼굴을 가진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즉 자유총선거와 다당제의 實施를 통해서만 청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는 蘇聯의 개입으로 무산되었으나, 오늘날 다시 이같은 改革의 움직임은 「프라하의 봄」 당시 이 운동을 탄압하였던 蘇聯을 중심으로 다시 일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蘇聯과 東歐의 改革내용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政治的 측면에서 자유총선거와 다당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시장원리의 도입과 사유재산제도의 허용까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사회주의 노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호네커의 합의공존론

1971년 동독의 스탈린으로 불리우던 울브리히트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한 호네커는 1972년 서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동·서독의 합의적 평화공존을 합법화시키면서 서독의 경제적 지원으로 동독을 社會主義國家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공산국가들에서 보여졌던 몇 가지 改革類型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형태의 개혁유형을 취할 것인가?

먼저, 북한이 5)번의 체코자유화나 고르바초프의 改革類型을 따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⁹⁵⁾ 왜냐하면 북한사회는 체코나 소련에서처럼 일반국민의 개혁

95) 이러한 견해는 브레진스키의 다음 저술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er's Sons, 1990).

· 개방에 대한 요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극도의 폐쇄·고립사회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주민들은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을 접할 수 없도록 모든 정보를 차단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주민들은 아직도 “남조선사회는 美帝가 강점하고 있는 사회이며, 거지가 득시글거린다”는 북한당국의 선전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또한 北韓이 中國식 改革類型에 따라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經濟에 있어서 부자될 권리를 인정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기에는 北韓의 취약점이 너무 많이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유형 역시 따르기가 간단치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즉 레닌이나 티토방식, 리베르만방식, 호네커식 등의 유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北韓은 金正日 후계체제로 옮겨가면서 必然적으로 경제침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하는 필연적 운명에 처하게 되므로 어떤 형태로든 改革이 불가피하다고 볼 때, 일단 기존의 폐쇄체제를 계속 維持하되 티토식이나 리베르만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때 공산주의 이념을 계속 固守함은 물론이다. 결국 공산당 일당 독재와 폐쇄체제를 固守하면서 내부적으로 제한적인 기업자주관리와 자율성의 인정 및 部分的인 이윤동기 허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또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北韓이 위와 같은 내부적인 部分的 改革만으로는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므로 北韓은 어쩌면 동독의 호네커형을 따라 남한과의 공존을 모색하면서 서구국가들과 한국의 도움을 암암리에 받음으로써 경제난을 극복하고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두만강 유역의 경제특구 설정문제는 바로 이러한 측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第 2 節 統治構造와 政治理念의 變化展望

1. 統治構造의 變化

北韓은 1972년부터 시작된 金正日에 의한 후계세습체제의 구축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서론 부분에서 제시했던 “과연 北韓은 변화할 것인가? 만약 변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統治구조의 변화방향을 展望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 北韓體制의 한계성은 이미 여러 면에서 노출되고 있다. 즉 관료주의적 병폐, 深刻한 경제침체와 군사비의 과다지출 및 누적된 외채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최근 蘇聯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의 잇단 민주화 역시 北韓의 體制變化에 큰 外壓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1991년 거센 변화물결의 여파로 인해 1992년을 北韓變化의 最大 고비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때 20여년에 걸친 철저한 권력 승계작업과 폐쇄체제를 固守하면서 主體思想에 의해 이념화된 北韓體制가 순식간에 큰 변화를 하리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또한 金日成의 죽음을 北韓變化의 기로로 보는 점은 의견이 일치하나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재한 金日成을 볼때 5~10년 정도는 생존할 可能性이 클 것 같다. 이같이 단기적으로 북한의 권력세습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다고 金正日 체제구축에 전혀 장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현재까지는 金正일이 金日成의 후광아래 순탄하게 권력승계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金日成이 죽은 이후까지 金正일에 대한 반대세력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金正일의 부상이후 권력에서 소외된 김일성의 처, 동생, 金正일의 이복동생 등의

반발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세습체제구축과정에서 숙청된 많은 세력들의 재기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사실이나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 또한 지금까지 金正日에 대한 이상화의 권력승계의 合理化를 철저히 패해온 것이 사실이나 金正日 이상화가 金日成이 죽은 후에 金日成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카리스마가 김정일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 후계체제의 붕괴와 金正日 유일독재체제의 구축이 모두 힘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金日成 死後의 북한통치구조 형태는 집단지도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⁹⁶⁾ 그 이유는 지도자의 사망시 그 후계자들에게 권력이 승계되었던 蘇聯의 경우에 레닌과 스탈린, 흐루시초프의 사망이나 실각 이후에 공통적으로 集團體制가 성립되었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한 북한구조 특성상 김정일외의 별다른 권력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일의 모자라는 통치능력과 지도력을 보충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 각부분의 핵심세력 응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모택동 사망이후 중국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여 집단지도체제가 출범한 사실에서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위의 예를 차치하더라도 反金正日세력이 공식적으로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는 北韓이라도 金日成이라는 신에 가까운 거물의 사망이 가져올 정신적 아노미(anomie) 현상의 폐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오진우 등을 비롯한 원로세력과의 집단지도체제구축은 必要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集團指導體制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권력분산과 合理的인 정책

96) 김일성 사후의 북한권력구조는 집단지도체제로 보는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의 견해가 있다. 박한식·고병철, 前揭書, p. 18; 김병린,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문제점,” 강릉대학 논문집, (강릉대학, 1986. 10), pp. 22~23.

결정이 수반되지 못하고 과거 蘇聯과 같은 무리한 권력집중을 감행하려 한다면 쿠데타 등과 같은 의외의 변화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政治理念의 變化

主體思想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제2장 2절에서 既檢討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의 부연을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北韓에서도 金正日에 의한 권력승계와 金正日 우상화의 기반을 主體思想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北韓에서는 主體思想이 김일성에 의해 창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것이 金正日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는 論理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主體思想은 金正日의 후계체제에 있어서는 거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극단적인 情報의 統制와 실리를 외면한 經濟政策속에서 이룩된 金正日 우상화가 김일성이 죽은 후에도 동일한 水準을 維持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과거의 항일투쟁경력과 반미·반제의 논리로 어느 정도 확고한 카리스마의 구축에 성공한 金日成이 경제적 실패를 상쇄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오직 思想教育에 의해 주입된 金正日의 카리스마는 김일성 死後의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를 거두지 못할 경우 급속하게 와해될 확률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김정일로서는 정권유지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실용주의 노선을 가미한 主體思想의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예측해 보건대 김일성 사후의 주체사상은 대체로 주체에 있어서의 金日成의 중요성을 減少시키면서 자신들이 표방해온 自主性에 입각한 인본주의로서의 主體思想의 측면과 民族主義的 요소의 主體思想의 측면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획기적

인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장기간 持續될 것으로 보이는 北韓의 경제침체를 감안해 볼 때 북한주민의 물질적·經濟的 측면의 갈등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의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외세와 매판자본에 의한 經濟發展의 추구결과 미제의 경제적 종속국으로 전락하였다고 비방하는 남한의 經濟發展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외세를 배격하는 民族主義的 색채를 떨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영도자론과 같이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날조로 이루어진 부분은 어느 정도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主體思想이 변형을 거듭하면서 북한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존속할 것으로 추측된다.

第 3節 經濟·外交·統一政策의 變化展望

1. 經濟政策의 變化

6.25전쟁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北韓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움으로 일제에 의해 建設된 1940년대 정도의 經濟水準을 회복하는데 성공하나 특히 蘇聯을 비롯한 사회주의 國家들의 분업체제속에 거의 흡수된 상태였던 北韓은 그만큼 세계 시장속에서의 적응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철저한 중앙집권적 計劃經濟를 固守하면서 이윤동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北韓이 저 생산성과 비효율성, 그리고 중공업위주정책의 산물인 생필품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여 소규모 합작회사의 設立을 허용하여 외자유치를 꾀하려던 북한의 경제재건노력은 行政的인 틀안에서 經濟的 구조

의 變化가 없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별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더욱이 1990년에는 기상조건의 악화로 急激한 농산물의 減少를 겪었으며, 社會主義體制의 붕괴로 인한 최근 蘇聯으로부터의 원조격감은 北韓經濟를 岌岌危殆로 몰아가고 있다. 91년 10월 김일성의 중국 방문에서도 북한은 기대한만큼의 경제원조를 얻어 내지 못한 것이 확실한 듯하다. 그러나 오랜 경제 침체로 인한 민생문제의 解決은 쉽게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경제침체의 劃期的인 호전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것은 金日成死後 金正日體制로까지 이어질 것이고 金日成에 비해 부족한 카리스마를 어떤 방법으로든 벌충해야만 하는 김정일로서는 정치생명을 걸고 모종의 經濟改革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북한경제는 1984년 8월 3일에 平壤에서 개최된 인민소비품 전시회에서 행해졌던 金正日의 교시를 계기로 근무시간외에 생산한 소비품을 판매하여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인정하는 “8월 3일 인민소비품” 生産運動을 실시해옴으로써 시장경제원리가 서서히 침투해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⁷⁾

社會主義 國家들의 붕괴로 인한 원조중단과 중국의 經濟能力不足 등으로 인하여 北韓이 경제적 공백을 메우고자 할때는 자연히 美國·日本 및 한국과의 經濟協力을 모색하는 외에 별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단지 國內的으로 앞에서의 “인민소비품” 生産運動을 확대한다든가 경공업분야에 대한 投資를 확대한다든가 터발면적을 擴大시키는 등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서구 특히 美·日과의 交流와 韓國과의 經濟協力이 北韓經濟의 회생에 결정적이고도 거의 유일한 대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97) 로동신문, 1990년 5월 5일자 및 1990년 5월 13일자.

그러나 북한이 쉽사리 실용주의 노선을 대폭 수용하고 開放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尙後 개방·개혁의 여파를 극소화시키면서 제한·통제된 開放과 改革 (Controlled Openness and Reform)의 길을 걸을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중국식의 철저한 정·경분리 原則을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닐까하고 진단해 본다. 따라서 조만간 經濟的인 측면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빨리 어느 정도의 경직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징후는 91년 12월 북한이 우리와의 합의를 통해 경제협력·교류에 적극성을 띄고 있는 점과 중·소 국경지대에 있는 두만강 유역을 UNDP계획에 의거하여 적극 개발하려는 의도, 그리고 선봉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함으로써 외자유치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⁹⁸⁾

결론적으로 외자도입이나, 합영법, 경제특구나 남북경제협력등 실질적인 대외개방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정책기조인 자력갱생의 원칙을 서서히 포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그 속도와 범위가 문제일 뿐이다.

2. 外交政策의 變化

외형적으로 표방되고 있는 북한외교정책의 목표는 그들이 공식 선언한 바와 같이 i) 獨自性, ii) 平和, iii) 親善圖謀로 되어 있다.⁹⁹⁾ 그러나 외견상 그럴 듯해 보이는 이러한 목표들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평화나 친선도모 등의 목표들도 북한의 필요에 따라 통일전선전술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목표와 달리 북한이 표방하고 있지는

98) 매일경제신문, 91. 12. 31 참조

99) 고병철, “북한외교정책방향—목표·제약점·전망—”, 「북한의 실상과 전망」
(서울: 동화연구소, 1991년 동화연구소 제1회 국제학술회의록), p. 67.

않아도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잠재적 외교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이 점에 관해 박한식·고병철 교수는 i) 정통성(legitimacy)의 추구, ii) 안보 추구, iii) 經濟發展 追求를 지적하고 있다.¹⁰⁰⁾ 그러나 이러한 目標들은 대부분 국가들이 외교정책의 추구에서 얻고자 하는 ‘자국의 안전과 독립, 이익의 추구’라고 하는 목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우리의 外交政策이 追求하는 i) 안보외교, ii) 경제외교, iii) 평화통일외교 및 iv) 홍보문화외교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들의 정통성 추구는 남한의 홍보문화, 평화통일 외교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남·북한은 공히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분리되었는데, 1948년의 정부수립 이후 계속해서 자신들이 서로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임을 주장하면서 상대국을 인정하는 어떤 국가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을 굳건히 고수해 왔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남북양측은 공히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무력에 의한 정통성 확보를 위한 전쟁(한국전쟁)에서 패배하자 전쟁 이후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군비증강을 그들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1961년 7월에 중·소와 각각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방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왔다.

1960년대에 들어서 중·소분쟁이 격화되었을 당시에도 북한은 처음의 친중국 노선을 변경하여 중·소간에 등거리 외교를 유지함으로써 주체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자주노선을 채택하였고, 실제로 1961년에 발표된 로동신문의 사설인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외국언론에 “북한의 독립선언”으로 대서특필됨으로

100) 박한식, 고병철, 前揭論文, p. 29.

써 북한의 國際弘報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¹⁰¹⁾

북한외교정책의 중요목표는 경제발전의 추구인데 경제발전은 사실상 정통성 확보와 안보추구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經濟發展을 위한 外交的 노력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크게 의존하였고, 특히 중·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때 北韓外交政策의 변화는 남한의 政治·經濟·社會的인 國內여건의 변화와 남한의 대응 태도와 함께 특히 중·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변화양상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1985년경부터 일기 시작한 국제정세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큰 변화에 직면하였고 미·소화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성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와서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었던 소련이 보수 쿠데타 실패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시장원리와 다당제에 입각한 民主主義·資本主義 體制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동구국가들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韓國은 소련과 동구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중국과의 교역량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1991년 9월에는 한국의 외교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남북한 동시UN가입이 실현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측의 외교적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측 으로서는 그들이 줄곧 고수해온 「하나의 조선정책」에 일대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현재까지의 추세로 본다면 북한은 정통성확보의 면에서 한국에 대패하

101) 上揭論文, pp. 34~35.

였고 그들 나름대로 안보상의 위기의식도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듯하다. 설상가상으로 91년 10월 北京을 방문한 김일성은 중국으로부터 기대한 만큼의 경제원조를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와의 대화에 응할 것을 종용 받고 돌아온 상태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추세를 만회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북한은 과연 변할 것인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소의 화해정책과 중·소의 정책변화 그리고 東歐 및 여타사회주의 국가의 자유화, 독일의 통일 등 외부요인과 한·소, 한·미 정상회담 및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 등과 같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강구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맹방인 중국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형태와 과정을 거치든지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와의 대화에도 과거 보다는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그 實例를 지난 12월 남북한의 합의서 채택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國際社會에서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고 北韓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開放과 改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北韓外交政策은 中國指導部의 성향에 크게 좌우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현재의 보수강경파 지도부가 얼마나 그 정권을 유지·장악할 것인가 하는 점은 북한외교정책변화의 제1요인이 될 것이다.

여하튼 북한외교정책은 현실지향적인, 즉 정치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그들의 경제난 극복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차츰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統一政策의 變化

정부수립 이후 남·북한 양측의 統一政策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수정·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으나 근년에 이르러 대체로 북한측은 「하나의 조선정책」에 입각하여 선국호단일화를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제 統一方案을 제시하는 반면에 남한은 1974년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으로부터 점차 구체화되어 最近에는 南北聯合이라는 과도체제 樹立을 통한 점진적 방식인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측은 정치·군사문제의 선결을, 남측은 경제·문화교류의 우선시행을 주장해 왔으나 양측의 견해가 점점 좁혀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정적으로 올해의 南北韓 UN同時加入과 독일의 통일,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는 북한의 「하나의 조선정책」을 더 이상 固守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과거와 같은 무력적화통일에 의한 방법을 北韓이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점차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의 가능성과 적화능력이 쇠퇴해가고 있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시간이 갈수록 南北간의 경제력 격차는 심화될 것이고, 北韓은 점점 최소한의 내부적 체제유지와 남한과의 동등권 維持에 급급해질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金日成 사후의 北韓은 내부문제를 선결해야 할 김정일의 입장을 감안할 때 통일에 대한 집착과 열의가 감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주 점진적으로 북한이 우리측의 단계적 統一方案에 서서히 접근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난 91년 5월 북한의 당국제부장 金容淳이 그들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정세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金日成 역시 그들의 통일방안이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면서도, 최근에는 남북정상간의 회담을 통해 통일문제를 협의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데서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통일방식이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성원해 주던 중·소 등 그들 동맹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한간의 통일방식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특히 蘇聯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의 통일방안이 시의에 적합하게끔 상황이 변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통일정책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北韓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오던 전제조건들이 우리의 前向的인 대북정책 채택으로 인해 하나씩 충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의 철수나 국가보안법의 폐지같은 조건은 현실적으로 미·북한관계 개선과 남북한 합의사항이 예정대로 이행된다면 그 명분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더이상 명분이나 구실만을 내세울 수는 없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역시 그 범위와 시기가 문제일 뿐 얼마가지 않아 대내외적인 공표를 통한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第5章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북한체제의 변화는 정치·외교·경제등 전분야에 걸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일성 사망」이라는 예측가능한 사실이 현재화된다면 북한체제의 변화는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변화의 정도가 어느 범위에까지 일어날 것이며, 그 속도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 문헌검증을 통해 展望해 본 北韓의 體制變化를 綜合해보면, 金日成 死後의 金正日 後繼體制가 確定的이라고 볼 때에 北韓은 政治面에서 集團指導體制를 採擇하면서 主體思想의 變化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經濟的인 沈滯를 克服하기 위해 점차 西歐와 韓國과의 交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南北同時 UN加入으로 정식 國際舞臺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억지주장이나 논리로써 사실을 호도하거나, 중·소의 일반적인 정책지거나 성원을 기대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즉 유엔 가입과 중·소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그리고 동·서 협력조류의 확산으로 인해 北韓의 행동반경은 좁아졌다고 하겠으며, 이의 탈피를 위해 西歐國家나 第3世界들에 대한 外交攻勢를 強化할 可能性도 있다.

결국 金正日 後繼體制는 內外的인 壓力과 政權維持를 위해서도 과거 社會主義 國家들에서 보여졌던 티토식·리베르만방식 및 호네커형 改革方式을 부분적으로 혼합하여 導入할 可能性이 매우 클 것으로 判斷된다.

또한 歷史는 항상 정반합적 방식에 의해 辨證法的으로 發展해온 바와 같이 北韓體制도 이제 變化해야 할 극단에 到達해 있다고 볼때 향후 北韓의 變化는

어떤 形態로든 거의 必然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NP에 있어서 韓國은 北韓의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民主化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척되어 가고 있다. 즉 北韓에 對應하기 위한 條件 중 外形的·物理的 與件과 함께 內部的·精神的 與件이 同時에 成熟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北韓에 의한 武力挑發 可能性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現實的으로 볼 때 그 可能性이 상당히 弱化되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韓國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적절한 對應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內部的으로 全國民的 輿望인 民主化를 加速化시켜 韓國내의 階層間·地域間 葛藤을 해소시키면서 社會統合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北韓에 대한 우리의 最高의 強點인 民主國家의 根本理念인 人間的 尊嚴性 보장과 民主的 制度의 實質的 定着에 最善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길만이 北韓과의 正統性 競爭에서 優位에 서서 北韓을 民族共同體의 일원으로서 包容할 수 있는 가장 確實한 길이 될 것이다.

또한 外形的으로도 지금까지의 經濟發展을 持續시키기 위한 全國民的 努力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결코 自慢이 아닌 自信感和 包容力으로 北韓을 孤立시키지 말고 대화와 開放·改革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韓半島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을 合意한 91년의 歷史的 事實을 韓半島의 安定과 平和確保에 적절히 援用하는 民族的 슬기와 예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分斷 40餘年에 이른 悲劇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平和的 統一을 達成하기 위해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에 입각한 對話의 廣場에 北韓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능한 한 包容的·伸縮的인 立場에서 便益을 줄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南과 北은 分斷된 조국의 平和的統一을 염원하는 恩계례의 뜻에 따라 7.4南北共同聲明에서 천명된 祖國統一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政治·軍事的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화해를 이룩하는 바탕위에서 무력에 의한 侵略과 충돌을 막고 緊張緩和와 平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각적인 交流·協力을 實現하여 民族共同의 利益과 繁榮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統一을 指向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平和統一을 성취하기 위한 共通의 努力을 경주함으로써 이 선언의 精神을 實體的이고 具體的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千萬 民族이 더이상 敵對·對立·競爭의 상대로서가 아니라 相互 補完, 協力·共存하는 關係로 發展한다면 民族的 力量을 그만큼 더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亞·太지역의 中心國家」로 浮上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아직껏 「對南赤化野慾」을 포기치 않고 있는 北韓이 만에 하나 저지를 지도 모를 對南武力赤化기도를 무력화, 사전防止하기 위해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全國民이 하나로 團合하여 「總力戰」을 展開할 수 있는 有備無患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結論적으로 全世界的 大물결이자 時代的 요청인 開放·改革的 民主化趨勢는 北韓이 아무리 「우리식대로 살기」라는 主體路線을 표방하여 北韓住民에 대한 思想教育和 監視統制를 強化하더라도 최근 北韓의 전향적인 대남정책에서 시사 받듯이 거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北韓體制의 變化는 既定 事實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時期가 언제가 될 것인지, 그 變化의 範圍가 어떻게 확정될 것인지는 지금으로서 豫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로서는 北韓의

開放·改革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12월의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던 점인 바, 이 역시 북한측의 성실한 합의사항 이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북한내 핵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핵설비에 대한 사찰문제의 수용여부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올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국내외의 시각을 북한당국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國內文獻

1) 單 行 本

강정구, 「북한의 사회」(서울 : 을유문화사, 1990).

고현욱 外,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마산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7).

국토통일원 편, 「북한개요」(서울 : 국토통일원, 1991).

_____, 「통일논총」 자료집Ⅱ(서울 : 국토통일원, 1988).

_____, 「통일문답」(서울 : 국토통일원, 1991).

_____, 「김일성 부자세습체제의 정책방향」(서울 : 국토통일원, 1984).

_____, 「북한의 정치체제와 행정정책에 관한 연구」(서울 : 국토통일원, 1989).

_____, 「한반도 내외환경과 한·소관계」(서울 : 통일원, 1990).

_____, 「통일문제연구」제 3 권 2 호(1991 여름)(서울 : 통일원, 1991).

_____, 「통일문제연구」제 3 권 3 호(1991 가을)(서울 : 통일원, 1991).

_____, 「소련의 대한국접촉·교류의 현황과 전망」(서울 : 국토통일원, 1989).

_____, 「한반도 평화와 통일환경 연구」(서울 : 국토통일원, 1988).

_____, 「고르바초프의 대외정책 자료집」(서울 : 국토통일원, 1988).

_____, 「통일이념과 민족공동체 형성」(서울 : 통일원, 1989).

_____, 「소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서울 : 국토통일원, 1989).

_____, 「동북아의 신국제질서와 미·소의 정책변화」(서울 : 국토통일원, 1990).

_____, 「북한 '80년대 정세평가와 '90년대 전망」(서울 : 국토통일원, 1989).

- _____, 「소련정치개혁의 전망」(서울 : 국토통일원, 1990).
- _____, 「1990년대의 한반도 통일환경변화연구」(서울 : 국토통일원, 1989).
- 김병오, 「민족분단과 통일문제」(서울 : 한울, 1990).
- 김성윤, 「신데탕트기류하의 한반도」(서울 : 반도출판사, 1991).
- 김양명, 「한국전쟁사」(서울 : 일신사, 1981).
-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서울 : 한울, 1987).
- 박창희, 「신북한 정치론」(서울 : 일신사, 1990).
- 북한연구소 편, 「김일성 통치 46년—오늘의 북한실상」(서울 : 북한연구소, 1991).
- _____, 「북한정치론」(서울 : 북한연구소, 1984).
-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주체사상총서3」(백산서당, 1989).
- 山内一南, 「현대 중국 경제개혁」(동경 : 학양서방, 1988).
-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 청계연구소, 1989).
- _____, 「한국공산주의의 운동사 연구」(서울 :禾多, 1985).
- 서효일, 「김일성 주체사상」(서울 : 한원, 1989).
- 양호민, 「북한의 소비에트화」, 「북한의 공산화과정 연구」(서울 : 고려대 아시아 연구소, 1973).
- 이명식 외, 「현대공산체제의 비교분석」(서울 : 일신사, 1987).
- 이상우 외, 「북한 40년」(서울 : 을유문화사, 1989).
- 이용필, 「북한정치체제」(서울 : 교육과학사, 1985).
- 이태욱, 「북한의 경제」(서울 : 을유문화사, 1990).
- 전인영, 「북한의 정치」(서울 : 을유문화사, 1990).
- 조점환, 「현대사회주의」(서울 : 문우사, 1989).

최 명, 「북한개론」(서울 : 을유문화사, 1991).

2) 論 文

고병철, “북한외교정책방향－목표·제약점·전망－”, 「북한의 실상과 전망」(서울 : 동화연구소, 1991년 동화연구소 제 1 회 국제학술회의록).

김갑철,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김일성주의”(제 4 차 한·중 학술회의주체 발표 논문, 평화통일연구소, 1983).

_____, “북한의 체제변화와 그 전망”, 월간「북한」(북한연구소, 1990. 12).

김승채, “북한체제의 유지능력에 관한 연구”, 「북한통일연구 논문집(Ⅲ)」(서울 : 통일원, 1991).

김시완, “주체사상의 이론구조와 이데올로기적 기능분석(Ⅰ)”, 「북한」(1989. 8).

김창순, “북한통치이데올로기가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북한통치이데올로기연구」(성남 : 정신문화연구원, 1984).

도홍렬, “북한의 사회변화와 주체사상”, 「통일연구논총」, 제83호(1987).

박승영, “북한의 김정일 권력승계정책에 관한 체계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한식,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양성철, 박한식「북한기행」(서울 : 한울 1986).

박한식, 고병철, “김일성이후의 북한정치 전망”, 「김일성이후의 북한」(서울 : 국토통일원, 1990).

오임묵, “북한의 김정일체제의 등장과 그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동국대 행정대학원, 1990).

백동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영향”(서울 : 국토통일원, 1990년 가을).

유영준, “정치발전론에서 본 김일성주체사상의 본질과 구성”(서울: 국토통일
원, 1977).

윤종현, “북한유엔가입 결정의 결과 속”, 「월간국방」(서울: 국방부, 1991).

이정수, “김정일 세습체제의 구조적 특징”, 「통일문제연구」(서울: 통일연구
소).

전인영, “주체사상의 형성배경과 이론적 배경”, 「이념문제주보」(1988. 9).

정우곤, “주체사상의 혁명적 수령론 연구”, 「통일문제연구」제 6 권, 제 1 호
(1990).

최창윤, “북한의 대중·소정책”, 고병철 외, 「북한외교론」(경남대, 극동문제연구
소, 1977).

허동찬, “김일성이후의 북한체제전망”, 「김일성이후의 북한」(서울: 국토통일
원, 1990).

3) 기 타

북한편람(서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0).

조선중앙연감(1985~1990).

해방20년 기록편(서울: 세문사, 1965).

호루시초프 미공개 회의록(서울: 공보처, 1990).

내외통신,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로동신문.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국방, 국제문제, 북한, 평화, 자유공론, 통일로

以外 多數文獻 參照

2. 外國文獻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 A Theory of Society and Political Process*(New York : The Free Press).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erate Regimes, 1945~1947*(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U. S. Department of State, *Moscow Meeting of Foreign Minister : December 16~26, 1945*(USGPO, 1955).

Glen D. Paige, *The Korean Decision*(New York : The Free Press, 1968).

Hannah Arendt,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51).

Hoag C.L.,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War Policy and the First Year of Occupation 1941~1946*(Washington : OCMH, 1970).

Kim Young C.,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1975" *Asian Survey*, Vol. XVI, No. 1(Jan. 1976).

Lee, Chong Sik, "Political Characteristics in North Korea : Pre-Korean War Stage" ; Robert A. Scalapino(ed.), *North Korea Today*(New York : F. A. Praeger, 1963).

Louis J. Halle,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Security ; A Power for the Nuclear Age*(New York : The Universty of America, 1984) ; Walter H. Judd "The Mistakes the Led to Korea,"in *Reader's Digest*(November, 1950).

Michael Doyle, "Endemic Surprises in First World-Third World Relations" in

- Klaus Knorr and Patrick Morgan, *Strategic Military Surprise*(New Brunswick : Transaction Book, 1983), p. 80.
- Rigby T.H., *Communist Party Membership in the USSR, 1917~1967*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 Robert A. Scalapino & Lee Chong Sik, *Communism in Korea, Vol. 1*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Robert C. Tucker, *The Soviet Political Mind*(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1971).

ABSTRACT

A Study on the Future of North Korea in the Post-Kim Il-Sung Era

By Yoon, Seok-Hyang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anks to the nuclear disarmament conferences between U. S. and Russia, the unprecedented harmonious atmosphere is rushing throughout the whole world. These global detentes, which have succeeded one after the other by the German unification, the revolutions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Northern and Southern Yemenite unification, and the downfall of Soviet Communism, have gradually affected the Korean peninsula,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However, sticking to "Living its own way" and "self-reliance" which is the sole governing ideology in its society and which also hampers the harmony among East-West sides, North Korea has adhered to "closeness and isolation" policy against outside, which prevents the unification of 70 million Korean nation.

But through the recent 5th High Level Political Con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wo countries succeeded to extract the so-called "Accord on nonaggression,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exchanges". This agreement shows us that there must be an internal limitation in North Korea's closeness

and isolation policy.

In relation to the worldwide turbulence, this paper will project how North Korea could be changed after Kim, Il-Sung, the dictator of the country, dies, based on many relevant materials and data.

Chapter 2 provides a foundation for the changeability of the North Korean society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establishment steps of dictator Kim's governing structure since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Chapter 3 states,

- (1) the internal matters in question in North Korea,
- (2) the effect on the opening of North Korea toward the world by post cold-war, the new global order, the neighbor's revolution and changing foreign policies toward the country,
- (3) the effect on the North Korean Society by south Korea's Nordpolitik and South-North Korea's simultaneous entrance into United Nations.

Throughout this chapter we can see the effect on North Korea by the turbulent restructuring order of the world since the mid 1980' s.

Chapter 4, the main body of this paper, tells how North Korea would be changed after dictator Kim's death, with aspects based on North Korea's inner/outer changing factors and the revolution models of the other communist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In North Korea, it is expected that big changes in governing structure are going to occur after the death of dictator Kim. There are too informal many arguments viewpoints fall into two approaches following ; long/medium-term

view and short-term view.

Although his eldest son (Kim Joug-II) will grasp the regime after dictator Kim's death and go forward with "self-reliance" adhesively, there is no choice for North Korea to open towards and improve its relationship with Western countries, pressure put out from Russia and China, the severe economic dullness, and the appalling results out of the international isolation.

As a result, in order to maintain its governing power, Jong Il Kim's North Korean government must introduce the evolutionary ways such as Titoism, Libermanism and Honekei-styled revolution, which have been shown in other communist countries.

From these points of view, it is agreed that North Korea will open toward the world and take a step in its revolution. It is only a matter of between time and distance.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th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for South Korea as follows :

- (1) We should prepare the measure that North Korea is willing to go forward with the peace conference table of its own accord. South-North Korea's simultaneous entrance into UN can be considered the reducing factor against North Korea's provocative acts. Therefore, we should keep in mind to respect North Korea's self-conceit, to invite it in our line as a another major part of our nation and to help it go forward as a responsible partner in the international world.
- (2) Because there is only a small chance of military invasion by North Korea, we should make stronger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military

invasion. For this reason, we should constantly exert our efforts o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omotion of democracy.

- (3) Finally, we should be concerned with our advance preparation and the unificaiton for our future after the unification.